
기록관리 혁신

'19년도 4분기 과제별 추진현황

2019. 12.



목 차

I. '19년 추진대상 기록관리 혁신과제 현황	1
II. 공공기록관리 혁신	4
III.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82

'19년 추진대상 기록관리 혁신과제 현황

□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

분야	혁신과제	세부과제	과제성격	소관부서	p.
①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1-1)기록물 개념 및 기록관리대상 정비	(1-1-2)기록물 관련 정의 및 기록화·기록관리 대상 정비	시행령개정	정책기획과	5
	(1-2)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1-2-1)기록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재설계	법률·시행령개정 시스템개선	지원기준과	7
		(1-2-2)처리과, 기관공통업무 보존 기간표 고도화	표준·지침반영	지원기준과	11
		(1-2-3)보존기간 책정준칙 운영 체계 마련	행정규칙제정	지원기준과	14
		(1-2-4)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 기준 수립	표준·지침반영	지원기준과	16
	(1-3)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	(1-3-2)시스템 개선을 통한 통보 제도 개선	업무개선 시스템개선	지원정책과	18
		(1-3-3)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개선	시행령·시행 규칙개정	지원기준과	22
	(1-4)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	(1-4-2)폐기 금지 제도 운영관련 조항 신설	시행령개정	지원정책과	24
	(1-5)기록부존재 공익침해 심사제도 도입	(1-5-2)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 제도 도입	법률개정	연구협력과	26
	(1-6)기록물 매체수록 전략 수립	(1-6-1)기록물매체수록 평가기준 정비 및 추진계획 수립	업무개선	보존인수과	28
		(1-6-3)기록물매체수록 중장기 전략 수립	업무개선	복원관리과	30
	(1-7)기록물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	(1-7-1)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제도 및 업무체계 개선	법률개정 업무개선	행정기록관	32
② 기록관리 기반 강화	(2-1)기록관 기능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	(2-1-2)기록관 설치기준 마련	시행령개정	정책기획과	34
		(2-1-3)기록관 전문인력 구성 모델 및 전문요원배치기준 마련	시행령개정	정책기획과	36
	(2-2)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 개선	(2-2-1)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 개선안 마련	업무개선	연구협력과	38
	(2-3)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2-3-1)공공기관 범위 등 관련 제도 정비	시행령개정	공공지원과	40
		(2-3-2)공공기관 경영평가 확대	업무개선	공공지원과	42
		(2-3-3)공공기관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 강화	업무개선	공공지원과	44
		(2-3-4)공공기관 협업체계 강화	업무개선	공공지원과	46

분야	혁신과제	세부과제	과제성격	소관부서	p.
	(2-4)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 및 설치 촉진	(2-4-2)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활성화 전략 수립	업무개선	정책기획과	48
		(2-4-3)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운영지원 강화	법령개정 업무추진	정책기획과	50
	(2-5)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2-5-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업무개선	정책기획과	53
③ 기록전문직 윤리 및 전문성 강화	(3-1)기록전문직 직무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3-1-1)직무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행정규칙제정 법령개정	기록관리교육센터	55
	(3-2)기록관리 직무윤리 교육 활성화	(3-2-1)직무윤리 교육 활성화	업무개선	기록관리교육센터	56
	(3-3)기록관리 전문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3-3-1)교육프로그램 체계화	업무개선	기록관리교육센터	58
④ 전자기록 관리체계 재설계	(4-1)메타데이터 관리 혁신	(4-1-1)메타데이터 정책 마련	표준·지침반영	전자기록관리과	60
	(4-2)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	(4-2-1)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기본방안 수립	업무개선	전자기록관리과	61
		(4-2-2)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	업무개선 시스템개선	전자기록관리과	63
		(4-2-4)이관모델 재설계	시행령개정 업무개선	전자기록관리과	65
	(4-3)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 및 포맷정책 재설계	(4-3-1)전자기록 장기보존 기본정책 및 상세이행계획 수립	업무개선	전자기록관리과	67
		(4-3-2)포맷정책 재설계	업무개선	전자기록관리과	69
⑤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	(5-2)비공개 상한제도 개선	(5-2-1)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시행령개정	공개서비스과	71
		(5-2-2)30년경과 비공개기간 연장 심의 절차 마련	시행령개정	공개서비스과	73
		(5-2-3)생산 후 20년경과 공개원칙 도입 검토	법률개정	공개서비스과	75
	(5-3)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 기록물 공개	(5-3-1)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 기록물 공개	법률·시행령개정	공개서비스과	77
	(5-5)기록물 기술모델 재설계	(5-5-1)기록물 정리·기술모델 재설계	업무개선	공개서비스과	80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분야	혁신과제	세부과제	과제성격	소관부서	p
① 생산 이관 수집	(1-1)대통령기록물 생산지원 및 분류/평가 체계 개선		법령개정 업무개선	생산지원단	83
	(1-2)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시스템개선	보존복원과	84
② 등록 재분류 지정	(2-1)다양한 기록유형별 등록 메타데이터 정의 및 업무방식 개선		업무개선 기준마련	기록관리과	85
	(2-2)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		법령개정 업무개선	기록관리과	86
	(2-3)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		법령개정 업무개선	기록관리과	87
	(2-4)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법령개정 업무개선	기록관리과	88
	(2-5)수집기록(구술·기증 등)물 관리 체계 개선		법령개정 업무개선	기록관리과	89
③ 보존복원 시스템	(3-1)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3-1-1)전자매체 관리기준 및 보존 절차 마련	업무개선 지침마련	보존복원과	90
		(3-1-2)보존공간 정비 등 보존환경 개선	업무개선 매뉴얼마련	보존복원과	91
		(3-1-3)데이터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용	업무개선 표준마련	보존복원과	92
④ 서비스 전시 교육	(4-1)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4-1-1)목록·원문 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기록서비스과	93
		(4-1-2)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기록서비스과	94
		(4-1-3)대통령기록연구 지원 확대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기록서비스과	95

공공기록관리 혁신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1	공공기록물의 개념 및 기록관리대상 정비
세부과제	1-1-2	기록물 관련 정의 및 기록화·기록관리 대상 정비 (중점)
과제성격	시행령 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추진계획>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9.6.) 및 개정 추진('19.12.)
 -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록물 생산 요건에 관한 규정 보완
 - 정의 규정 신설*·보완** * 동종대량 등/ ** 웹기록물·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 ※ 세부 내용은 '19년 시행령 개정(안) 참고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기록물 생산·관리 대상 정비													

<추진실적>

1/4 분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시행령 개정과제 수요조사(~1.14.) 및 시행령 개정과제 검토 보고(3.28.) ※ 법률개정 연계과제(5개), 입법미비사항 개정과제(18개) 등 총 23개 과제 ○ 공공기록물 요건에 대한 원내 의견 청취(2.20.) ※ 2019년 제1차 연구세미나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요건에 대한 검토																
2/4 분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계획 수립(4.4.) 및 의견수렴<table border="1"><tr><th>구 분</th><th>중앙</th><th>지자체</th><th>교육청</th><th>정부산하 공공기관</th><th>영구기록물 관리기관</th><th>기록관혁신 위원회</th><th>국가기록 관리위원회</th></tr><tr><th>일 시</th><td>'19.4.19.</td><td>'19.4.24.</td><td>'19.4.26.</td><td>'19.5.2.</td><td>'19.4.30.</td><td>'19.5.14.</td><td>'19.5.30.</td></tr></table> ○ 기록물 개념 및 성립 요건 관련 학계 의견 청취(6.8.) ※ 2019년 한국기록학회-국가기록원 공동 학술발표회 : 공공기록물이란 무엇인가?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을 둘러싼 쟁점 토론	구 분	중앙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기록관혁신 위원회	국가기록 관리위원회	일 시	'19.4.19.	'19.4.24.	'19.4.26.	'19.5.2.	'19.4.30.	'19.5.14.	'19.5.30.
구 분	중앙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기록관혁신 위원회	국가기록 관리위원회										
일 시	'19.4.19.	'19.4.24.	'19.4.26.	'19.5.2.	'19.4.30.	'19.5.14.	'19.5.30.										
3/4 분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보고('19.8.12.) 및 입법절차 추진* * 부처의견 의견조회(8.26~9.6), 사전규제심사(8.23.), 성별영향평가(8.28.),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9.24.), 입법예고(9.4.~10.15) 등																

	○ 「공공기록물법」 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세부 과제로 기록물 개념 고도화* 등 검토·논의 * 필수적 보호범위 및 자율적 보호범위 설정, 기록물 범위에 따른 벌칙 적용 등 규정 보완 ※ 향후 법체계 개선 시('20)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
4/4 분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10.18.~) * 법제처 심사(~'20.1월), 국무·차관회의 상정('20.2월), 공포·시행('20.3월)
<현안/쟁점사항> ○ 관련 판례·정치적 이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령 상 모든 조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이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기록관리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자문 병행 추진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2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세부과제	1-2-1	기록분류체계 및 기록관리기준표 재설계 중점
과제성격	법률·시행령 개정, 시스템 개선	추진완료시기 2024
담당부서	지원기준과	

<추진계획>

- 'BRM 단위과제 및 기록관리기준표 혁신 사업' 추진
 - 단위과제 운영체계 재검토*를 통한 분류체계 개선(안) 수립 (3월)
 - * 단위과제 확정 절차(기록관리기관 관여 여부), 보존기간 연계 방식(현행 1:1), 단위과제 하부 관리단위(단위과제카드) 통제 등
 - 분류체계 개선(안) 원내외 의견수렴 후 확정(~6월)
 -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추진 (하반기)
 - ⇒ 중앙부처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사업 실시('20년~'24년)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분류체계 개선(안) 수립													
분류체계 개선(안) 원내외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추진													
중앙부처 기준표 정비 사업													5개년 계획

<추진실적>

1/4 분기	○ BRM 단위과제 운영 관련 업무협약(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3.7.) - BRM 단위과제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도입 가능 여부 - 기록물 관리단위(단위과제카드) 재설계 관련 논의 ○ BRM 단위과제 운영 관련 기관 의견 조사(기록물지침교육시, 3.20.) - 단위과제 '사전협의' 및 단위과제 '분리운영' 제안 및 의견 수렴 - 업무과중 및 체제개편 부담 등으로 단기 적용 용이한 '사전협의' 선호도 높았음
2/4 분기	○ 제3차 연구세미나 개최(4.10.) “기록관리기관의 BRM ‘단위과제’ 관리권한 확보 방안” ○ 기관 유형별 단위과제 운영 및 BRM 관리자 현황 분석(4월) ○ 중앙행정기관 기록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2회 /4.19., 5.3.)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 9명 참여 ○ 기관 BRM 운영 형태별 기록관 및 BRM 담당자 심층인터뷰 실시(13회/5.2~6.5.) * 교육부, 서울시 등 24개 기관 36명 참여 [참고] 시행 계획 및 인터뷰 서식
3/4 분기	○ 기관 의견반영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방향 보고(7.1.) * 각 부처 결과안내(7.2.) ○ 단위과제 실무협의회 구성 및 단위과제 개선 추진 등 협의(7.16.) 《 단위과제 운영 시 기록관 역할 증강 관련 》 - 참여 : 조직기획과, 지원기준과 (4명) - 내용 : BRM 기능분류체계 재설계 방안, 단위과제 승인절차 등 제반사항 - 결과 : BRM관리자교육(9월) 시 기록관-조직부서간 협조방침(기록관 선 검토 후 처리) 전달(조직기획과) 교육시행 요청 공문 발송(국가기록원) 《 행안부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개선 관련 》 - 참여 : 정책평가담당관, 운영지원과, 지원정책과, 지원기준과 (5명) - 내용 : 기관 의견청취 결과 제안된 행안부 시범 정비 내용 공유 - 결과 : 지원기준과 기본계획 수립. 운영지원과·정책평가담당관 협조 ○ 행안부 문서목록 및 단위과제카드 목록 추출(정보통계담당관/8.6.) - 대상 : 19년 상반기 생산접수 목록 및 과제카드목록 전체 - 사유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시범 정비 사업 대상 분석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추진계획 보고(9.19.) - 기간/대상 : 9월~12월(4개월)/본부 124개 관리부서 보유 단위과제 1,187개 - 내용 : 업무·법규분석 및 기록물조사를 토대로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개선 - 주관 : 지원기준과, 본부 운영지원과 ※(협조) 지원정책과, 본부 정책평가담당관실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팀* 운영(1차 회의/9.23.) - 대상 : 지원기준과 분류기준팀(5명), 본부 운영지원과 기록팀(2명) - 안건 : 팀원 분장 내역 확인 및 부서별 업무분석 및 단위과제 시범 정비 결과 공유 - 비고 : 단위과제 조사 완료 일정 확인(10월말), 조사 서식 추가(업무분석 비교표) *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비정규 인력 채용(1명)
4/4 분기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관련 업무협의(정책평가담당관/9.27.) - 단위과제 조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부서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위과제 정비 결과 시스템 반영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BRM관리권한 확보 * 지원기준과 BRM기관관리자 권한 및 온나라과제카드 권한 신청(11.6.), 확보 완료(11.18.)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관련 단위과제 조사서 작성(9.16~10.28.) - 작성주체 : 지원기준과 분류기준팀(5명), 본부 운영지원과 기록팀(2명) - 범위 : 122개 부서별 업무분석서 및 단위과제(카드) 조정 목록 작성 - 방식 : 주간회의(5회) 실시, 작성 내용 공유 및 오류 수정, 개선방향 도출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관련 시스템 반영 방식 조사(10.16.)

- 내용 : 국가인권위 기록연구사 면담을 통해 '18년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 내용 및 결과 반영 방식 문의
- 결과 : 카드가 없는 단위과제 우선 정비, 부서 대면 확인, 단위과제카드 작성 기준 작성 배포, 매월 재편철 안내 등 수행, 온나라 및 BRM 관리권한 확보하여 직접 시스템 결과 반영 **☞ Top-down 방식* 추천**
* 관리자 직권 승인방식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관련 시스템 반영 방안 보고(10.28.)

- 내용 : ^(1안) BRM과 온나라 일괄 반영 ^(2안) 부서 신청에 의한 개별 반영
- 결과 : 정해진 기한 내 개선 결과 반영을 위해서는 1안이 적합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추진 중간보고(11.25.)

-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문제 유형(9종) 구분

구 분	문제 유형(9가지)
단위과제 구성	① 부서 고유 단위과제가 없어 기록화 누락 여부 점검 필요성 대두
	② 동일 명칭의 단위과제 중복 운영
	③ 업무 내용 대비 단위과제 과소 운영이 의심되는 부서 존재
	④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 단위과제 미정비(無기록 단위과제 방치)
단위과제 크기·유형분류	⑤ 업무 특성에 비해 단위과제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책정된 사례 다수
	⑥ 단위과제의 기능유형 오분류('공통' 및 '고유' 단위과제 간 혼선)
보존기간 책정	⑦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 생산이 없거나 미흡하게 책정
	⑧ 보존기간 책정기준(공공법 시행령 별표1) 대비 보존기간 과소 책정
	⑨ 동일 단위과제에 상이한 보존기간 책정

- 개선 검토 결과 : 122개 관리부서 단위과제 2,868개 → **2,617개(▲251개)**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단위 과제	합 계	2,868	2,617	무기록과제 등 과제 폐지(416) 과제 신설(315)
	고유	935(33%)	923(35%)	고유과제 신설(277)
	기관공통	183	177	유형 오분류 수정
	유사기관공통	93	0	"
	처리과공통	1,657	1,517	"
	무기록과제	238	0	
	고유과제 全無부서	17	0	
	과제 신설	-	315	고유, 기관공통
보존 기간	30년 이상	389(32%)	441(40%)	처리과공통 제외
	10년 이하	822	659	"
	30년 이상 全無부서	38	3	서울상황센터 등 상황실
과제 카드	합 계	3,683	3,136	단위과제 오분류 사례 다수 확인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안 관련 내외 검토회의 개최(11.27.)

- 참여 : 내부(지원기준과, 지원정책과, 연구협력과 등 10명), 외부(대전경찰청, 서울강북구청, 한국문화정보기술 등 3명)

- 내용 : '무기록 단위과제' 최종 확정 전 추가 확인사항, 단위과제 크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 적절성, 처리과·기관·유사기관 공통 및 고유 단위과제 구분기준, 부서별 협의과정에서 고려사항, 제도개선 필요성 등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안 관련 부서별 방문 협의(12.11.~'20.1.16.)
 - 방식 : 단위과제 조사서 작성자가 본부 122개 부서 기록물관리담당자 개별 면담
 - 내용 : 부서별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개선안 설명, 조정 후 확정
 - ※ 협의 결과 시스템 반영 : (1차) 74개 부서 / '20.1.1. (최종) 48개 부서 / '20.1.18. ~ 19.
- 향후 계획
 - 행안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최종 결과보고('20.2월)

<현안/쟁점사항>

- '20년 이후 중앙부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업 확대 방안 마련
 - 50개 중앙부처 대상 개선사업 홍보 및 수요 조사 실시 계획 수립
 - 부처별 업무분석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발굴(연구용역 수행)
 - 지원기준과 사업 수행 인력 증원 필요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2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세부과제	1-2-2	처리과,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 고도화
과제성격	표준·지침 반영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지원기준과	

<추진계획>

- (중기) 처리과·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고도화
 - 처리과 및 기관 공통업무 단위과제 명, 보존기간(안) 마련(~6월)
 - 각 기관 대상 단위과제 명, 보존기간(안) 의견수렴(~9월)
 - 기관 공통업무 단위과제에 대한 해당 업무설명 작성(~11월)
 - 처리과 및 기관 공통업무 단위과제 보존기간표 제정(~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처리과 및 기관 공통업무 단위과제 명, 보존기간표 제정													
기관 공통업무 단위과제 업무설명 작성													

<추진실적>

1/4 분기	○ 처리과·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연혁 확인 및 검토 - 처리과(20개)·기관 공통업무(384개) 보존기간표 작성('06.3.~6.) -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지침」 표준 제정('07.12.)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표준 개정(표준명 변경)('12.12.) - 처리과·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표준에서 분리, 기록물관리지침에 포함
2/4 분기	○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운영 현황 사례조사 - (기관) 보건복지부, 병무청, 외교부,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 (점검내용) 지침 상 처리과(20개), 기관(386개) 공통업무 단위과제명 및 보존기간 적용 현황 - (점검방식) 공통업무 단위과제 보존기간표를 기본으로 각급 기관에서 사용 중인 단위업무 명 및 보존기간 대조 ○ 처리과/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개선 계획(안) 보고 -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적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업무설명 및 기록물 유형 제시)

- 유사 단위과제명 및 명칭 변경, 미사용 단위과제 정비
- ※ 시범적용 : 1단계(국가기록원), 2단계(행정안전부), 3단계(각급 기관)

○ 처리과 및 기관 공통 단위과제 운영현황 파악 문제점 도출

- (대상) 기록원 21개 과 현행 '처리과' · '기관' 공통 단위과제('19.1.1.~6.30.)
- (내용) 원 표준화* 대비 실제적용(과제 구성 및 기록물(과제카드)) 현황
 - 처리과 공통, 기관 공통 단위과제별 생산 · 접수 기록 도출
 - 단위과제 명칭, 보존기간, 사용 여부(과제 카드여부), 편철상태 등

* 『기록물 관리지침』의 '처리과공통'(20개), '기관공통(386개)'를 기준으로 처리과 공통 단위과제는 전 부서 전수적용, 기관 공통은 해당 부서(주무부서) 선택 적용

- (결과) 처리과 및 공통 단위과제 사용 편차 전 부서 만연 (3개~19개)
 - 처리과공통 : 672개 중 252개가 임의책정이며, 실제 기록생산은 212개
 - ☞ 표준 처리과 공통(20개)과 별도로 '정책실명제' '맞춤서비스 추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 등 본부 일괄 반영 12개 단위과제가 '처리과 공통'으로 분류
 - 기관 공통 : 주무여부 상관없이 적용. 명칭변경 및 임의책정 상당수이며, 상당수 단위과제 카드가 없어 공통 단위과제 실제 미사용 추정
 - ☞ 지원부서와 고유부서 간 단위과제가 일괄 등록되어 있음(25개~26개)

3/4
분기

< 운영현황 >

- 행정지원과 : 처리과 공통과제(32개) 중 19개 사용 / 기관 공통과제(25개)
- 정책기획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10개 사용 / 기관 공통(26개)
- 연구협력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12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전자기록관리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6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기록정보기반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6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지원정책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11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지원기준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7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공공지원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3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공개서비스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12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보존인수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11개 사용 / 기관 공통(26개)
- 복원관리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10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기록관리교육센터 : 처리과 공통(32개) 중 7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행정운영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14개 사용 / 기관 공통(26개)
- 기획제도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4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기록관리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9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기록서비스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7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보존복원과 : 처리과 공통(32개) 중 16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대통령기록물생산지원단 : 처리과 공통(32개) 중 12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나라기록관 : 처리과 공통(32개) 중 15개 사용 / 기관 공통(27개)
- 역사기록관 : 처리과 공통(32개) 중 15개 사용 / 기관 공통(26개)
- 행정기록관 : 처리과 공통(32개) 중 17개 사용 / 기관 공통(25개)

	⇒ 당초 공통 단위과제 표준화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실정으로 부내 다른 부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 - 개선점 1 : ‘원 표준 공통 단위과제’ 외 부 내 공통 과제 구분 - 개선점 2 : 원 표준 공통 단위과제 기준의 적용성 제고를 위해, 각 공통과제별 ‘표준카드’ 등 기록종류 구체적 부기(bottom up) - 개선점 3 : ‘기관 공통’ 단위과제 효율적 운영방안 → 대안 검토 (1안) 표준화 기관 공통 단위과제 무수정 적용 방식 (2안) 표준화 과제를 전거로 기관 특성에 따른 유연 적용 방식
4/4 분기	○ 각 개선점 검토에 따른 추진 방안 마련 중 - 기록원 표준 공통 단위과제 이외 본부 일괄 등록 과제 여부 확인 - 본부 일괄 등록 정책과제인 경우 분류기준 구분(BRM 등 관련시스템 반영) - 개정이 필요한 현 공통과제와 오펜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구분 * 특히 특정 단위과제(예 : 서무) 기록물 과다 편철 중점 검토 - 오펜첼 방지 등 표준화 공통 단위과제 적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과제 업무 설명에 과제별 생산기록물 유형을 부기 - 기관공통 과제 운영 개선방안 검토(무수정 적용 vs. 전거 적용) * 산출물(‘20년) 1. 「공통 단위과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안」(생산 기록물유형 명세 포함) 2. 처리과 및 기관 공통과제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개선방안(준칙화 여부 등) * 표준 기관공통 단위과제 부서별 기록관리기준표 적용 개선안 포함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2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세부과제	1-2-3	보존기간 책정 준칙 운영체계 마련		
과제성격	행정규칙 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지원기준과			

<추진계획>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 ③항 및 제26조 ②항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 보존기간 책정 시(기관/기록관), 보존기간 협의 및 직권 책정 시(영구기록물관리기관) 근거로 활용
- 보존기간준칙 운영지침 초안 마련 및 의견 조희
 -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책임 및 역할, 준칙 작성 절차, 부록 등을 반영한 준칙 운영지침 초안 마련
 - 국가기록원 내외 전문가, 기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학계(기록학, 역사학, 행정학 등) 등 폭넓은 의견 수렴
- 보존기간준칙 운영지침의 법제 반영 추진
 - 보존기간준칙 운영지침을 훈령 등으로 제정 추진 검토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				2020				2021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보존기간준칙 운영지침 마련													
공통 보존기간준칙 마련													
기록유형 및 주제별 보존기간준칙 마련													

<추진실적>

1/4분기	○ 해외 기록 평가·선별 제도 및 도구 조사 분석 실시 -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평가제도 및 공통/고유 평가·선별 도구 ○ 보존기간준칙 운영지침 초안 마련을 위한 준칙 구성 및 내용 검토 - 감사원, 방통위 등 중앙행정기관 보존기간준칙(41개)
2/4분기	○ 해외 기록물 평가제도 운영 사례 보고 - 미, 영, 호주, 캐나다의 평가 근거 법률, 권한, 평가제도 특성, 평가도구, 시사점 등 ○ 보존기간준칙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기본 요소 검토(계속) - 목적, 권한, 책임, 범위, 준칙 운영 방법 및 절차 등

3/4 분기	○ 제도개선 대상 파악을 위한 기본요소 도출 - 국가별 제도 및 평가·선별·처분 도구 등 상세 요소 검토 * 국가별 평가도구(GRS, MIDA, AFDA 등), 평가선별기준(OSP 등) 분석 - 시사점 도출을 위한 관건 항목 6개 설정		
	구 분	내 용	비 고
	권한행사	• 전임제(미국) vs. 위임제(영국 등)	
	기준정책	• (대기준) 국가별 역사, 정치, 행정 등이 투영된 공기록 선별 기본기준(기본 서명문) • (특화기준) 특정 기간, 생산기관, 주제(정책·사건·사고) 기록 유형(case file, dataset 등) 등을 담은 특정 평가선별 세부기준(영국 OSP)	각종 정책 개발
	평가선별 적용도구	• 기록에 적용 vs. 기록 생산배경에 적용 * 미(GRS) 캐나다(MIDA) 등은 기능 또는 기록유형을 명시 생산(된) 기록에 적용, 한국 관리기준표는 기능(단위과제)에 생산 전 적용	기록중심 다원기준
	적용시점	• 생산 후 평가선별 vs. 생산 전 평가선별 * 미(생후 순차선별) : 컷오프 → 기록/비기록 → GRS적용 → RS적용 * 영(생후 2단계선별) : 생후 5년 → 약 25년(Grigg system) * 한(생전/후 2단계선별) : 과제 보존기간 책정(생전) → 폐기심의(후)	2단계 효율성 제고책
	보존기간 책정유형	• 기능 또는 사안의 속성, 기록생산 유형, 이벤트(○○사안 종결 시 트리거) 등 다양한 책정동기에 따라 특성 반영	남용 방지책 모색
	정부 공통기능	• 국가기록원 제정기준 이행(기록 또는 기록원 관계법규) • 생산결과에 사후 포괄적용(누락 등 오적용률 ↓, 적용성 ↑)	준칙화 적용성 제고책
4/4 분기	○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한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준칙 운영지침(안) 작성 - 근거, 정의, 작성 절차, 운영 방법 등 상기 해외 사례 시사점 분석 결과 반영 -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운영 지침 초안 작성 및 중간보고(12.24.) ○ 준칙 운영 지침에 의한 개별 「보존기간 준칙」 개발 준비 착수 - 중요 기록 평가선별 대원칙 및 특화 세부기준 대상 분야 도출 * 영구보존이 필요한 핵심 기능, 주제, 기록 유형 등 공통사항 파악 - 분야별 준칙 작성 대상, 범위, 기타 고려사항 등 검토 * 처리과/기관 공통업무, 기관, 특정 기록 유형 등 준칙 시범 작성 대상 검토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2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세부과제	1-2-4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기준 수립
과제성격	표준·지침 반영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지원기준과	

<추진계획>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 분석 대상 선별
 -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분석 대상 선별 및 조사
 - 생산에서 폐기, 이관까지 기록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중 평가, 분류 항목 상세화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 평가분류 기준 수립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스템 기초조사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스템 선별 및 조사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 분류 항목 상세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 평가분류 기준 수립													

<추진실적>

1/4 분기	○ 중앙 부처 보유 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 현황 조사 - 중앙 부처 보유 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범정부 EA포털 기준 시스템 현황조사 ※ 행정정보시스템 전체 2,258개 시스템 중 현용시스템 1,223개
2/4 분기	○ 데이터 서비스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기준 사례 검토 - 영국 UK Data Service, 「Collections Development Selection and Appraisal Criteria」 ('18.2.13. 발행)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기준

3/4
분기

- 행정정보시스템 기록(dataset) 확인 및 보존기간 검토(전자기록관리과 협업)
※ 대상시스템(6개 기관/14개 시스템)

	구분	기관명	시스템명
1	외부 (10개)	①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2		②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
3		③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4			국토정보시스템
5		④ 환경부	지속가능 발전 포털
6			환경분쟁조정정보화시스템
7		⑤ 교육부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관리시스템
8			전자자료관
9			통합교육연수시스템
10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11	내부 (4개)	⑥ 국가기록원	교육훈련시스템
12			전자서명장기검증 시스템
13			기록물생산현황시스템
14			기록물분류기준표관리시스템

4/4
분기

- 행정데이터세트 시스템별(14개) 보존기간 책정기준 수립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 조사 검토

※ 기존 ISP 6개영역 61개 항목 → 변경실행) 6개 영역 36개 항목

	관리기관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기록관리정보	법규정보	업무정보
1	기관명	시스템명	대표 데이터	단위기능명	법령, 고시, 규정, 표준	업무명
2	부서명	시스템개요	비정형 자료	종류	업무활용목적	업무내용
3	담당자명	구축연도		데이터	주제어	업무목적
4		EA정보		구동SW	데이터소유권한	대상
5		DBMS정보		저장방법	데이터관리권한	
6		DBMS 업무명	암호화데이터 사용유무	접근권한		
7		개발산출물	연계시스템 유무	정보공개 구분		
8			연계 내역 첨부	보존기간		
9				보존기간 책정사유		
10				적용범위		
11				처분방법		
12				처분관련정보		
13				처분 제약사항		

- 시스템의 보존기간 책정 방법* 적용(14개 시범기관에 적용)

* 기록관리기준표(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과 “기록물관리지침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 기준으로 시스템 내 각 단위기능의 보존기간 책정 후 최상위 보존기간으로 시범책정

	기관명	시스템명	단위기능명	보존기간	최종보존기간
1	①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복무	5년	영구
			급여	30년	
			인사	영구	
			평정(성과평가)	10년	
2	②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	관보개시	영구	영구
3	③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 관련 업무	영구	영구
4		국토정보시스템	국가 토지소유권 확인	영구	영구
5	④환경부	지속가능 발전 포털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영구	영구
6		환경분쟁조정정보화시스템	환경분쟁조정	영구	영구
7	⑤교육부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관리시스템	영어봉사장학생 선발 운영	5년	5년
8		전자자료관	전자자료관 시스템 구축	영구	영구
9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연수정보 관리	30년	30년
10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도서관리(서지, 소장)	준영구	준영구
11	⑥국가기록원	교육훈련시스템	기록관리 교육자료	10년	10년
12		전자서명장기검증 시스템	장기검증	영구	영구
13		기록물생산현황시스템	통계기능	영구	영구
14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시스템	기록물 분류기준표 기능	영구	영구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3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		
세부과제	1-3-2	시스템 개선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 중점		
과제성격	업무·시스템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지원정책과			

<추진계획>

- 생산현황 통보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 (기록관) 연도별 기관내 기록물 생산주이 분석 및 중요기록물의 생산여부 확인, 이관 대상 선정 시 활용 방안 마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통계집(가칭) 발간, 이관대상 선정 시 활용 방안 마련
- 시스템 개선을 통한 통보제도 개선방안 검토
 - 전자기록물 생산·관리시스템 등록정보 업로드 및 통계 관리 프로세스 분석
 - 전자문서를 제외한 생산현황 제출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수작업에 의한 기록물 통계 추출 방식이 아닌, 전자·비전자 기록물 유형 모두 시스템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방안 검토
- 생산현황 통보대상 및 방식 추가 검토
 - 생산현황 통보 유형별 재검토 및 서식 재검토 필요

항목		검토 사항
서식1	일반기록물 전자 크기	전자문서 크기 제출시 관련 부서 비협조, 업체 의뢰 등 어려움 발생→항목의 활용여부 확인 후 삭제 여부 검토
서식2	조사연구검토서 생산현황	"명칭 개정 사항, 명칭 변경(예 :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기록물의 작성 등)에 따른 구분 등 세부항목 마련 필요
서식3	조사연구검토서 생산목록	명칭 변경에 따른 목록 항목 변경 검토
서식4	회의록 생산현황	대면회의 개최시 회의록생산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서식 검토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생산현황 통보대상 및 방식 재검토													
통보방식 개선 방안 마련 및 검토													
생산현황 통보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생산현황 통보대상 및 방식 추가 검토													

<추진실적>

1/4 분기	○ 기관별 생산현황 분석서 작성(2월) - 중앙·특별행정기관(198개) 유형별 생산현황 분석서 작성 ○ 생산현황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부처전담자 실무회의 개최(1차, 3.29.) - 기관별 생산현황 분석서 내용 공유 및 생산현황 개선 방안 논의 - 생산현황 분석서 수정·보완사항 논의
2/4 분기	○ 생산현황 결과 공유방안 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4.12) - '16~'18년 생산현황 결과 우리원 홈페이지 게시 - '18년 생산현황 분석 결과 기관별 공유 및 미비점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사유확인 ○ 생산현황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부처전담자 실무회의 개최(2차, 4.18.) - 생산현황 개선 방안 및 분석서 수정·보완사항 논의 ○ 생산현황 분석을 위한 유형별 담당자 회의 개최(3차, 5.16.) - '생산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부처전담자 1·2차 실무회의'내용 공유 - 생산현황 관련 기관 문의 사항 및 개선 방안 의견 공유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개선방안 검토(5~6월) - 생산현황 유형 담당자별 서식 간소화 및 기재요령 작성·제출 및 취합(5.31) - 생산현황 서식 변경 검토(안) 마련(6월) ○ 기록생산·관리시스템에 의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방안 검토(6월말~)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온나라-RMS-CAMS 간 등록메타데이터 비교, 연계규격* 차이, 기록물 유형별 차이점 등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_1부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2부 CAMS 연계」 - 기록물 유형별 차이점 및 자동화 필요성 여부 등 검토 - 기록물 유형별 통보 자동화 여부 방안 정리 ※ 관련 표준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요구 등 후속조치
3/4 분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관련 문제점 분석(7월) - 일반기록물 목록은 RMS-CAMS로 자동 통보되나, 일반기록물 통계 및 모든 유형의 목록·통계는 별도 조사 후 수기 작성하여 SORA로 제출 - 시청각, 행정박물, 간행물은 온나라 또는 RMS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으나 등록이 안되고 있고, 등록된 정보가 있어도 통보 기능이 없음 - 조사·연구·검토서는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시 별도 관리 제외대상*이며, 일부 간행물로도 생산·등록되고 있어 별도 조사 필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17조 제①항 따라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나,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연구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록 조사항목은 기록물 건목록이나 통계가 아닌, 회의명, 개최 횟수, 주요참석자, 속기록 작성횟수 등의 정보로 별도 조사가 필요함

- 기록생산·관리 시스템에 의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가능 여부 검토(8월)
 - 기록물 유형(6종)·시스템(온나라RMS, CAMS)별 등록 관리 메타데이터 및 연계규격 등 분석 결과,
 - * 비밀기록물은 혁신과제 1-3-3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개선」으로 별도 진행
 - 생산현황 통보 대상 중 기록물생산·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기록물(문서, 시청각, 박물, 간행물)은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연계규격 추가를 통하여 통보 자동화 방안 마련 가능,
 - (일반기록물) RMS에 통계 기능을 추가하고, RMS-CAMS 연계 규격에 통계 항목을 추가하면, 목록뿐만 아니라 통계도 자동화 가능
 -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RMS에 통계 기능을 추가하고, RMS-CAMS 연계 규격에 통계 및 목록 항목을 추가하면,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기능개선 및 연계규격 추가를 하여도,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통보 자동화 불가
 - 기록물생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고 별도 조사 및 수기작성이 필요한 기록물(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은 통보 자동화 곤란
 - (조사·연구·검토서) 현재 조사연구검토서는 일반문서 또는 간행물로 등록되고 있어, 기록물생산시스템에서 별도로 유형 구분을 해야 자동화 가능
 - (회의록) 일반문서 등은 기록물 등록 정보(건수량 및 건목록)를 조사하지만, 회의록은 회의명, 개최횟수, 주요참석자, 속기록 작성 횟수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어, 별도 조사 및 수기 작성 불가피
 - ※ 회의록 생산의무 규정(「공공기록물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 생산·관리를 통제하기 위해 생산현황 통보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시스템 자동화 기능 】

유형	통계			목록		
	작성	제출	연계규격	작성	제출	연계규격
일반기록물	X	X	X	O	O	O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X	X	X	△ ¹⁾	X	X
조사연구 검토서	X	X	X	X	X	X
회의록	X	X	-	X	X	-

⇒

【 시스템 개선에 따른 자동화 가능 여부 】

통계			목록		
작성	제출	연계규격	작성	제출	연계규격
O	O	O	O	O	O
O	O	O	O	O	O
△ ²⁾			△ ²⁾		
X			X		

⇒

△¹⁾ 등록된 기록물에 한해 목록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미등록기록물의 경우에는 수기 작성 필요
 △²⁾ 기록생산시스템에 별도의 유형구분이 되어 등록되면 자동화 가능

4/4
분기

- 기록관리시스템(RMS-CAMS)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개선 방안 보고(12.18.)
 - (기본방향)
 - ① 통계는 별도 작성하지 않고, RMS 및 CAMS에서 목록을 기반으로 통계가 자동 추출되도록 하여, RMS-CAMS로 통계를 통보할 필요 없음
 - ② 일반문서처럼 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 목록도 RMS를 통해 CAMS로 자동 통보
 - ※ 조사·연구·검토서는 법령 개정됨에 따라 생산현황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의록은 회의명, 회의개최횟수 등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있어 자동화 불가

- (개선방법)
 - 통계 자동 추출을 위한 RMS·CAMS 연계규격 변경 및 기능 개선
 - 통계 자동 추출을 위한 통보 서식 개선 및 간소화
 - 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 목록 추가 통보를 위한 RMS·CAMS 연계규격 변경 및 기능개선
- 신뢰성이 확보된 생산현황 데이터로 활용도 제고
 - (기록관) 기록물 생산·관리 현황 파악(주요기록물 생산누락, 오분류·오편철 등) 후 지도감독 및 기록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기본 자료 활용
 - (기록원) 기록관리업무 기초자료 활용(기관별·유형별 분석 결과에 따른 미흡기관 선정하여 맞춤 컨설팅, 동종대량·비치기록물 사전 파악하여 이관 제외 등)
- ‘기록관리시스템(RMS-CAMS)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개선 방안’ 원내 관련부서 협의(12.24.)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3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		
세부과제	1-3-3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개선		
과제성격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지원기준과			

<추진계획>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개정안 작성·제출
 - 비밀기록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 서식 간소화
- 관계기관(국가정보원, 각급기관 등)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생산현황 통보서식 간소화(안) 마련													
관계기관 검토 및 내·외부 의견 수렴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진실적>

1/4 분기	○ 직제 개편에 따른 우리 원 비밀기록물 소장현황 점검결과 보고(2.11.) - 점검 결과에 따른 비밀 목록 현행화 추진 및 기존 생산현황 통보서식 문제점 분석
2/4 분기	○ 국가기록원 비밀기록물 목록관리시스템 현황조사(2.11.) - 원내 소장 비밀기록물 현황조사를 통한 비밀기록물 관리 현안사항 분석 ○ 관계기관 의견 청취(제1차 경찰청 기록관리 업무협의회, 4.26.) - 대규모 조직의 특성상 관리가 어려워 간소화에 찬성하나, 구체적 의견은 없음 ○ 비밀관리시스템(보안나라) 현황조사(행안부 비상대비자원과, 5.8.)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비밀 생산현황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 ※ 단,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시스템 미도입(사유 : 전산 내·외부망 미분리) ○ 관계기관 의견 청취(제1차 군 기관 기록관리 업무협의회, 5.16.) - 통계 작성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작성하도록 개선 필요 - 비밀소유현황 제출서식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계 특성 상(전년도 현황 비교 등)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 - 현재 비밀관리시스템(보안나라)을 미도입, 향후 자체 시스템 개발·도입 예정

3/4 분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서식 개선방안 마련 - (통보서식 간소화) 중복 통계항목 간소화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 생산·재분류 통보현황 간소화, 보유현황 항목 삭제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내용('17.2.22.)을 반영한 대외비 항목 제외 - (통보방식 개정) 현황 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통보 방식 보완 · 제출기관을 대상으로 확인공문 발송 절차 추가
4/4 분기	○ 통보서식 개선방안 보고 완료(12.11.) - 기존 개선방안 외 통보유형 명칭 변경(간행물 → 책자류) 추가 ○ 관계기관 사전 협의절차 추진 완료(12.19.) - 「공공기록물법」 제34조에 근거한 국가정보원과의 법정 협의절차 추진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완료(12.19.) - 「공공기록물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비밀기록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 서식 변경을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록물법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4	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
세부과제	1-4-2	폐기 금지 제도 운영 관련 조항 신설 중지
과제성격	시행령 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지원정책과	

<추진계획>

- (사례조사) 폐기금지 운영현황 및 이행절차 등 해외 사례 조사·분석
- (하위법령 신설) 폐기금지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 마련
 - 폐기금지 대상, 결정 및 해제절차, 각급기관 이행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폐기금지 해제절차 등
 - ※ 법률안 국회통과 예정('19년 상반기) → 하위법령 마련('19.6월) → 시행('19.12월 예정)
- (체계설계) 폐기금지 결정·이행·해제·점검 절차마련, 절차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역할 및 업무 설계 등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사항 도출													
폐기금지 관련 해외사례 조사													
하위법령 조항 마련													
폐기금지 체계 설계													

<추진실적>

1/4 분기	○ 그 간 국가기록원 폐기금지 발동 사례* 조사(발동사안, 발동사유, 추진절차 등) * 과거사 기록물, 5.18 기록물, 사회적 참사 기록물 ○ 해외 처분동결 운영 현황 조사(미국, 호주) - 처분동결 대상, 발동근거·주체, 대상기관, 처분동결 발동 및 추진절차, 해제절차 등 - 처분동결 고시문, 처분동결 및 해제 요청서, 발동사례 등 세부 조사
2/4 분기	○ 공공기록물법 폐기금지 시행령 조문(안) 작성 ① (폐기금지 대상)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 / 재판·수사·감사·조사 등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요청

	② (폐기금지 결정) 폐기금지 요청방식, 관보고시, 대상기관 통보, 대상기록물 목록제출 ③ (폐기금지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폐기방지 필요조치, 폐기금지 이력관리 ④ (폐기금지 해제) 해제 요청방식, 관보고시, 대상기관 통보, 추후 프로세스 ⑤ (폐기금지 관련 협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대상기관 협조 ⑥ (서 식) 폐기금지 요청서 및 해제요청서 서식
3/4 분기	○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운영방안 검토(~9월) - 법령 신설에 따른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와 구체적 추진내용 검토 - (내용) 절차도(전체 프로세스, 폐기금지 통보 후 대상기관 업무절차도, 해제통보 후 대상기관 업무 절차도 등), 절차별(폐기금지 대상·결정·통보·이행·해제) 세부추진 내용, 추진 주체별(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 수행업무, 폐기금지 대상 기록물 관리방법(이력관리, 기록물 평가, 이관절차 등) → 향후 폐기금지 제도 운영 매뉴얼화 예정 ○ 공공기록물법 폐기금지 시행령 조문(안) 보완(계속) - 폐기금지 요청기관 범위 명확화 ※ (기존) “재판·수사·감사·조사 등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 → (수정) “국민의 안전·권익보호·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장 등 수사·조사기관의 장이 요청” (법률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 폐기금지 대상기록물 관리사항 상세화 ※ (기존) ‘폐기금지 대상 기록물이 해제되기 전까지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 → (보완) ‘폐기금지 및 해제시기·사유 등 명시하여 이관’, ‘해제 통보받기 전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심의회 폐기결정 기록물이 폐기금지 대상이 될 경우 폐기시행 보류 및 해제 후 재평가 실시’,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폐기금지 대상 기록물 관리방안 수립·시행’
4/4 분기	○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12.10) - 폐기금지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규칙 제정(안) 마련 및 원내협의·확정 ※ (주요내용) 폐기금지 시행 결정절차, 폐기금지 요청권한이 있는 수사·조사기관의 범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폐기금지 요청 범위, 폐기금지 기록물 관리방안 등 ○ 폐기금지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마련(11.6.) - 업무관리시스템, CRMS 및 CAMS 내 폐기금지 대상 기록물 지정·해제 및 관리 등 기능요건(안) 마련 ※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추진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5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세부과제	1-5-2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과제성격	법률 개정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연구협력과	

<추진계획>

-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 검토
 - 혁신과제 1-1(공공기록물의 개념 및 기록관리대상 정비)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기록화의 범위·유형 기준 등과 연계하여 검토
 - 혁신과제 1-2(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의 다양한 기록을 생산, 획득,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연계
 - (국가기록원)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정책 수립
 - (기록관) 각급 기관이 생산·획득해야 할 기록의 구체적인 범주 및 기준을 평가체계(기록관리기준표 등)에 반영
- 기록부존재 관련 법령(정보공개법, 감사원법, 부패방지법 등), 사례, 논문 등 검토
-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사례 검토
 - (대상) 기록부존재로 공공업무 수행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공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업무(기능)
 - (사례)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 공공기관의 회의록이 미생산 되거나 분실
 - 한국수자원공사 해외 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미생산
 - 한국가스공사 해외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미생산
 - 한국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부의 안전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음
 - 한국광물자원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총 15회의 원본 분실
 - (근거) 공공기록물법에 명확히 규정된 조항*을 책임의 근거로 적용
 - *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 ➡ 자원외교 관련 기록의 미생산, 관리 소홀로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향후 검토 사안
 - 개별법에 생산 의무가 부과된 업무 중 국민의 권리,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
 - 법규와 상관없이 '공익'의 범주, 기준 등을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
 - 행정심판 등의 제도로 운영하거나 법에 규정하여 공식 감사제도로 도입하는 방안 등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례 도출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적용													

<추진실적>

1/4 분기	○ 기록부존재 공익침해 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 정보공개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등) · 감사원법(감찰의 범위, 감사방법, 감사 결과의 처리 등) · 부패방지법(국민감사청구권,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실시의 결정 등)
2/4 분기	○ 기록부존재 공익침해 심사제도 관련 해외 유사사례 검토 · 미국 e-Discovery(전자적 증거개시절차) ○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대상 검토 -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를 근거로 공익침해 사례 검토
3/4 분기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포함하여 검토 - 기록의 생산단계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목표)를 위해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검토 ※(기관 의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록화 대상 및 분류체계 정비 등 사전 작업이 필요, 이후 공론화 과정, 구체적인 실행방법 마련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 필요
4/4 분기	○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선행사항 검토 - 각급기관별 기록화대상, 기록분류체계 등 연계사항 - 기록생산 의무화 방안, 기록 존재여부에 대한 기관 입증책임 등 ○ 정책연구용역, 시범적용, 공론화 등 중장기적 추진방향 검토

<현안/쟁점사항>

- 공공업무의 철저한 생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각급기관 기록평가정책 수립 등이 선행된 이후 연계*하여 제도 검토 필요
 - * 1-1(공공기록물의 개념 및 기록관리대상 정비), 1-2(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 심사청구 주체, 심사 기관, 심사대상 업무 및 대상기록의 범위, 절차, 후속조치,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 등 쟁점 사항 다수 존재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6	기록물 매체수록전략 수립		
세부과제	1-6-1	기록물 매체수록 평가기준 정비 및 추진계획 수립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보존인수과			

<추진계획>

- 매체수록 평가 선정 절차·기준 재정비(상반기)
 - 3관(복원관리과, 역사·행정기록관)별 매체수록 추진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 * 기 매체수록 판단 현황, 진여량, 상태·가치평가, 매체수록(스케닝, M/F) 추진상황 등 파악
 - 원내 매체수록 평가 기준·선정 절차 재정비 및 기준서(유형화, 사례 등 반영) 마련
 - * 기록물 매체수록 기준(원내 표준) **폐지**(2017년)
- 기록물 매체수록 판단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하반기)
 - (대상) 매체수록 미판단 비전자기록물 : **약 2,430천여권**
 - * 매년 추가되는 기록물정리·등록 대상량은 당해 연도 해소 검토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매체수록 평가 선정 절차·기준 재정비													
매체수록 판단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매체수록 판단 추진 (‘19년 정리사업 대상 기록물)													

<추진실적>

1/4 분기	○ 매체수록 선정기준 국내외 사례 조사(문헌 및 온라인) ○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 변화 속에서 각국의 보존 및 서비스를 위한 매체수록 기준정책 동향 조사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2/4 분기	○ 그간의 우리 원 매체수록 판단 추진경과 및 미판단 기록물 분석 - (경과분석) : ‘14년도까지 정리등록 사업 연계 및 스캔파일 열람 요청 대상 매체수록 판단 - (문제점) : 상태검사 및 보존기간 재평가 등 결과 미반영, 중요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매체수록 판단 사례 없음(전자기록 장기보존 매체수록 판단 절차 미비) - (개선방향) 상태검사 및 보존기간 재평가 등 결과 반영을 통한 매체수록 판단기준 및 프

	로세스(CAMS 기능개선 포함) 재설계 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반영 등
3/4 분기	○ 매체수록 판단 기준 재검토 - 수록대상 기록물 ◦ 준영구 이상→영구(증빙·학술·연구·권익보호, 훼손이 심한 기록, 자주 사용 기록 등) ※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 기록물은 복제본 제작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 이중보존(법 제21조) ◦ 영구기록물 전량 전자매체 수록, 마이크로필름 제작 최소화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준용) - 매체종류 : 종이, M/F, 전자매체, 육안식별 가능 보존매체? ◦ 기록물의 장기보존 매체로서 M/F의 유효성 문제 ※ 보존가치 높은 전자기록 M/F 등 육안식별 가능한 매체수록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매체수록 판단 절차 재검토 - 개별 단위업무→융합 단위업무 ※ 정보공개, 상태검사 및 보존기간 재평가 등 업무과정에서 시급성, 훼손도 및 가치 등을 고려 판단
4/4 분기	○ 우리 원의 기존 M/F장비, 인력 등을 고려 ○ 중요 기록물 이중보존 매체로서 M/F매체 유지 여부 방향 검토 ○ 보존방법, 매체수록 등 관련 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안) 마련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과제로 계속 추진
<현안/쟁점사항> ○ 중요 기록물 이중보존 매체로서 M/F매체 유지 여부 - 중요 전자기록물 M/F수록?, 급변하는 IT환경에서 M/F매체의 효용성? ※ 보존가치 높은 전자기록 M/F 등 육안식별 가능한 매체수록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6	기록물 매체수록전략 수립
세부과제	1-6-3	기록물 매체수록 중장기 전략 수립 중점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복원관리과	

<추진계획>

① 매체수록 중장기 전략 수립

- 마이크로필름(MF) 수록, 디지털화 등 매체수록 추진전략 마련
 - 국내·외 유관기관 사례조사 및 연차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하반기)
- 중장기 추진방향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사업 추진(5~12월)

② 매체수록 대상 선정 개선

- 매체수록 우선처리 대상 기준·절차 개선 및 선정 추진(계속)
 - 현행 우선처리 선정 기준표 등 개선 및
 - * 열람활용도, 생산시기, 상태등급, 콘텐츠 활용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 '20년 우선처리 대상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9~11월, 3관)
 - 3관별 우선처리 대상 선정 실무협의 및 선정심의회 개최(12월)

③ 온라인 접근 및 활용성 개선

- 열람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한 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5~10월)
 - 디지털화 공공표준 개정사항 반영, 검수 강화, 향후 디지털화 개선방안 검토 등
- 매체수록 업무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 열람·활용용 디지털화 파일(JPEG)을 텍스트 검색이 가능한 파일(PDF+OCR) 형태로 개선 추진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				2020				2021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매체수록 현황 조사 및 추진방향 설정													
매체수록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매체수록 노후장비 교체사업 추진													
마이크로필름 지침 개정 추진													
매체수록 우선대상 선정 기준절차 개선													
매체수록 우선처리 대상 선정													
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 추진													
매체수록 업무 개선방안 마련													

<추진실적>

1/4 분기	○ '19년 기록물 매체수록 추진계획 보고(1.22.) - 우선순위 선정결과에 따른 매체수록(스캐닝, MF)*, 용역사업과 병행 처리를 통한 잔여량 처리기간 단축, 매체수록 노후장비 교체 등 * ('19년 계획) 스캐닝 10,000권(자체 3,500권, 용역 6,500권), MF 7,000권 ○ '19년 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 추진 - 일상감사 후 계획보고(1.22.), 계약의뢰(2.15.), 조달공고(3.14.~4.24.)
2/4 분기	○ 매체수록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해외 사례조사 추진 - 계획 보고(4.5.),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4월말), 번역 및 전문가 감수(~6월), 설문조사 및 결과정리(7~9월) ○ '19년 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4.30.), 협상 및 계약(~5.20.), 착수보고(5.24.) 및 사업 추진(~11.16.)
3/4 분기	○ 매체수록 수시요청 관련 선정심의회 개최 및 '19년 대상 조정·확정(7.26.) - 5.18민주화운동,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발간, 용역사업 대상기록물 등 ○ 매체수록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해외 사례조사 추진 - 영문 설문지 작성·보고(7.30.), 조사대상기관*에 메일 발송(7.31., 연구협력과), 사례조사 1차결과 보고·공유(9.10.) ※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8개국 기록관 및 도서관 ○ 매체수록 노후장비 교체사업(변경) 추진 - 매체수록 관련 해외 사례조사 1차결과, 해외 아카이브 등에서 MF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여 MF수록 장비 도입 재검토 ○ '19년 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실시(9.20.) - 스캐닝 및 CAMS 업로드(목표대비 60%), 작업내역 기록화, OCR 테스트 등 진행중
4/4 분기	○ '19년 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 완료 및 OCR 테스트 결과 보고(11월) - 기록물 130만면 스캐닝 및 CAMS 업로드, 디지털화 작업내역 및 해쉬값 등 기록화, OCR 적용가능성 테스트 등 과업내용 완료(11.15.) - 국내·외 관련 사례, 테스트 결과에 따른 적용가능성 및 향후 추진방안 등 디지털화 기록 OCR 테스트 결과 보고(11.26.) ○ 매체수록 우선처리 선정 기준·절차 개선 및 '20년 처리대상 선정(12월) - 기준·절차 의견수렴 및 '20년 매체수록 수요조사(10.28.~11.15.), 매체수록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회(12.18.) 및 심의회(12.27.)를 통한 심의·확정 ○ 매체수록 해외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차별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12월) - MF 수록 등 현황, 디지털화 기록 원본 인정 여부, 이관 전자매체 보존·관리방안 등 해외 동향 설문조사 결과(4개국 6개기관 회신) 보고(12.16.) - 매체수록 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디지털화 확대 및 활용 강화, MF 관리방안, 전자매체 보존 및 관리방안 등 중장기 전략 수립(12.31.) ○ 매체수록 중장기 추진방향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사업 완료(12월) - 매체수록 노후장비 교체사업 계약(12.9., 오버헤드스캐너 등 5종 20종), 설치 및 테스트 완료(12.27.)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과제	1-7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제도개선		
세부과제	1-7-1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제도 및 업무체계 개선		
과제성격	법률 개정,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행정기록관			

<추진계획>

- 미정리 정부간행물* 보존실태 조사 및 정리·등록 방향 검토(3월)
 - * 본원 청사서고 및 3관 서고에 약 2만권(복본 포함시 6만여 권) 보존
- 우리 원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업무프로세스 점검·분석(3~5월)
 - 정리·등록, 서가배치 등 업무 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7월)
 - 국립중앙·국회도서관과 간행물 관리현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논의
-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법령개정 준비(7~12월) ※ 2020년 법령개정
 - 납본수량, 납본기관 범위 등 검토, 개정(안) 마련, 의견조회(기관, 전문가 등)
-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개정 및 납본제도 홍보(8~12월)
 - 발간등록번호 신청절차 및 생략 유형, 납본 유의사항, FAQ 등 지침 정비
 - 「간행물 Q&A 사례집」 발간·배포, 오납본 사례 및 개정지침 안내 등
-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업무체계 개선방안 마련(10월~2020년)
 - 정리·등록 절차 간소화, 전자파일 활용, CAMS 기능개선 등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정부간행물 보존실태 조사					■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업무프로세스 점검·분석						■							
유관기관 회의 개최							■	■	■	■	■	■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지침 개정							■				■		
정부간행물 납본제도 홍보							■	■	■	■	■	■	
정부간행물 업무체계 개선 (방안마련, 개선(안) 실행)								■	■	■	■	■	
정부간행물 법령 개정							■	■	■	■	■	■	

<추진실적>

1/4 분기	○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일부 정비(1월) - 조직개편 사항(송부처 주소 등) 반영, FAQ 내용 수정 등 ○ 우리 원 소장 미정리 정부간행물 보존실태 현장조사 실시(1~2월) - 대전청사 서고(1.23), 나라기록관 서고(2.20), 역사기록관 서고(2.27) ※ 조사결과, 3관 서고에 미정리 간행물 2만여 종(5.8만여 권) 보관 중 ○ CAMS 등록 정부간행물 현황 분석(3월) - 발행기관 유형, 생산시기, 소장위치, 스캔여부, 공개여부 등 ※ CAMS 등록 간행물 중 서고정보가 없는 간행물(3,781권)의 홈페이지 목록표출 임시제외 ○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업무프로세스 점검·분석(3~5월) - 발간등록번호 부여, 정리·등록, 서가배치 업무과정 현장 점검
2/4 분기	○ 우리 원 납본 정부간행물 정리·등록 및 디지털화 방안 마련(5.1.) - 미등록 및 '19년 이후 납본 간행물 정리·등록, 미스캔 간행물 스캐닝 방안 등 ○ 장기간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미등록 정부간행물 등록 추진(5월~) - 기타유형 기록물 정리사업에 포함*하여 CAMS 등록 추진 * 대상/사업기간/장소 : 간행물 6만권(나라4.5만, 대전 1.5만) / 8월~12월 / 행정기록관 ○ '19년 이후 오납본 정부간행물 조사 및 정리·등록(5~6월) - 오납본 간행물 4,000권 이송(나라·역사기록관→행정기록관) 및 정리·등록·서가배치
3/4 분기	○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 협의(9.19, 9.24) - (국회도서관) 정부간행물 전자파일 원문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 타진 -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간행물 수집 및 공동 활용 방안* 검토 * 정부간행물 원문구축 목록 교환 및 기 구축된 원문 데이터 공동 활용 추진 검토 ○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미등록 정부간행물 등록 추진(9월~) - 기타유형 기록물 정리사업*에 포함하여 CAMS 등록 추진 * 대상/사업기간/장소 : 간행물 6만권(나라4.5만, 대전 1.5만) / 9월~12월 / 행정기록관
4/4 분기	○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업무체계 개선방안 마련(11월~2020년) - 정부간행물 통합관리 방안, 정리·등록 절차 간소화, 전자파일 활용 등 ○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개정 및 납본제도 홍보(11~12월) - 발간등록번호 신청절차 및 생략 유형, 납본 유의사항, FAQ 등 지침 정비 ○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법령 개정 검토(11~12월) - 전자파일 납본 의무화 등 검토, 개정(안) 마련, 의견조회(기관, 전문가 등)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Ⅱ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1	기록관 기능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		
세부과제	2-1-2	기록관 설치 기준 마련		
과제성격	시행령 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추진계획>

- 시행령 제10조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
 -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으로 기록물 생산량·보유량 제시
 - ※ 시행규칙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 필요 시 두 개 이상의 기록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록관을 기록물관리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 삭제하여 설치규모·단위 등에 자율성 보장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장은 기록관 설치·운영해야 하는 관할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관보나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고시
 - 본부(청)기관과 소속기관 간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필요한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 통합 운영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기록관 설치기준 마련													
내·외부 의견 수렴													
시행령 제10조 개정 추진													

<추진실적>

1/4 분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2/4 분기	○ 시행령 개정과제 기관유형별 설명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179개, 4.19.), 지방자치단체(245개, 4.24.), 교육청(193개, 4.26.) - 영구기록물관리기관(7개, 4.30.), 정부산하공공기관(620개) 및 대학(338개, 5.2.)

	○ 개정안 기록관 혁신위원회 자문(5.14.) ○ 제51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정안 보고(5.30.)
3/4 분기	○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 추진 -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보고(8.9.) - 관계부처 의견조회(8.26.~9.6.) - 입법예고(9.4.~10.15.)
4/4 분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10.18.~) * 법제처 심사(~'20.1월), 국무·차관회의 상정('20.2월), 공포·시행('20.3월)
<현안/쟁점사항> ○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형태, 기능, 역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1	기록관 기능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
세부과제	2-1-3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인력 구성모델 및 전문요원 배치기준 마련 중점
과제성격	시행령 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추진계획>

- 시행령 제78조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
 -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수정
 -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을 '기록물관리 담당 전문인력'으로 명확화
 - 기록물관리 담당 전문인력은 기록물 보유량에 따라 증원
- ※ 기록물 보유량 2만5천권 당 1명 추가 배치(전문요원은 전문인력의 2분의 1이상)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기록물관리 전체정원 기준 마련													
기준(안)에 대한 내·외부 의견 수렴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전문요원 자격) 개정 추진													

<추진실적>

1/4 분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2/4 분기	○ 시행령 개정과제 기관유형별 설명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179개, 4.19.), 지방자치단체(245개, 4.24.), 교육청(193개, 4.26.) - 영구기록물관리기관(7개, 4.30.), 정부산하공공기관(620개) 및 대학(338개, 5.2.) ○ 개정안 기록관 혁신위원회 자문(5.14.) ○ 제51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정안 보고(5.30.)
3/4 분기	○ 기록물관리 인력 배치 기준 관련 조직기획과 업무협의(6.13.) - 정원 증원은 기관별 필요성 등을 고려, 매년 행안부와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별 법령에 일률적으로 해당 내용 규정하는 것은 수용 불가 ○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보고(8.9.)

	- 인력배치 기준 제외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제78조제1항제1호)은 원안대로 개정 추진
4/4 분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지원을 위한 기관별 소요인력 분석 등
<현안/쟁점사항> ○ 시행령 개정안에 인력배치 기준 미포함, 전문요원 추가 배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18년 연구용역 결과* 반영하여 기관별 소요인력 파악하여 지원 방안 마련 *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인력구성 및 소요인력 산출기준」 - 기관별 업무량 등을 근거로 시급성 정도를 반영, 단계적으로 정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원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Ⅱ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2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 개선		
세부과제	2-2-1	기록관리현황 기관평가제도 개선안 마련		중점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연구협력과			

<추진계획>

-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개선 방안 수립
 - 「전자기록관리 등 평가방법 고도화 및 평가도구 개발 연구」 결과 활용
 - 지난 10년간('08~' 17)의 기록관리 평가 점검·분석
 -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 기관 유형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기준 등 평가지표개선(안) 마련
 -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개선(안) 통보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개선 방안 수립													

<추진실적>

1/4 분기	○ 각 기관 의견 및 2018년 연구용역 결과 분석 ○ 기록관리 분야별 쟁점 및 개선방향 설정 ○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방안 마련 - 평가대상, 지표, 방식, 주기, 절차, 환류에 대한 개선(안) 마련
2/4 분기	○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 - 평가대상 479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4.2~4.16) 및 132기관 회신(27.5%) ○ 의견조회 결과 설명회 개최(3회) - 중앙행정기관·특행(4.19), 교육(지원)청(4.26), 공공기관·대학(5.2) ○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방안(평가체계) 정책전문위원회(5.24)·국가기록관리위원회(5.30) 심의 완료 ○ 기관평가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지표개선반 운영 계획 수립·보고(6월말 예정)
3/4 분기	○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지표 개선반 구성 및 운영(7~10월) - 기관 현장전문가(19명), 외부전문가(3명), 내부전문가(8명) 등 전체 33명으로 구성·운영 ※ 전체 회의(8.6), 분과 회의(1차 8.6, 2차 8.28, 8.30, 9.2), 조정 회의(9.18)

	○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지표개선(안) 마련 - 평가지표 도출, 측정기준, 세부제출자료 등 평가지표개선(안) 마련 - 평가지표를 15개 내외로 개선(현재 22~25개), 필수/선택 구분(현재 필수) - 필수지표(80점) : 기관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록관리 인프라 및 업무수행 분야 - 선택지표(20점) : 정책지표, 자율지표, 대체지표 중 기관에서 선택 ▪ 정책지표(정성) : 기록관리 혁신 등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표, 사전안내 ▪ 자율지표(정성) :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례 ▪ 대체지표(정량) : 정성지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정량 지표 ※ 기관의 선택지표에 따라 배점이 만점(100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4/4 분기	○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지표개선(안) 의견조회(10월) - 481기관(2기관 신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9.25.~10.8.) 및 설명회 개최(9.30.~10.2.)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9.30.), 공공기관·대학(10.1.), 교육(지원)청(10.2.) ○ 평가지표개선반 전체회의를 통한 평가지표개선(안) 조정 및 확정(10.22.) ○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개선(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방안 수립 및 보고(12.18.) - 평가지표개선(안) 정책전문위원회(11.27.) · 국가기록관리위원회(12.5.) 심의·의결 ※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체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완료(5.30) ○ 평가대상기관(481기관)에 평가제도 개선(안) 통보(12.20.) - 2021년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위한 평가체계·평가지표 사전안내 ※ 개선된 기관평가제도로 2021년부터 격년제 평가시행 - 2021년 평가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 2022년 평가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3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세부과제	2-3-1	공공기관 범위 등 관련 제도 정비 (중점)		
과제성격	시행령 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공공지원과			

<추진계획>

- 원내 관련부서 의견청취(3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정책기획과, 4월)
- 공공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 및 내용 보완(5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추진(8월~, 정책기획과)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직접관리기관 제도개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 포함여부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													

<추진실적>

1/4 분기	○ 제도개선 관련 원내 업무협의회 개최 및 시행령(안) 제출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정의,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 범위 포함여부, 회의록 생산범위, 재평가 절차 등 논의 ※ 3.18(월) 502-1호 / 원내 전문가 11명 참석 ○ 지방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포함여부 법률전문가 자문(법무담당관실 정호영 법무관)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포함 ○ 시행령 제3조 특수법인의 범위와 기준 등 법률전문가 자문 -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설립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 ※ 3.25(월) 공공지원과 사무실 / 공공지원팀, 법제팀 참석
-----------	--

2/4 분기	○ 2019년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물관리지침 교육(정책기획과 법제팀 협조) - 공공기관 관련한 시행령(안) 참석자 대상으로 설명 ※ 4.9(화) 후생동 대강당 / 979개 기관 중 380 곳 참석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제 설명회 개최(정책기획과 법제팀 주관) - 공공기관 및 대학 대상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회의록 작성 범위 등 설명 및 의견수렴 ※ 5.2(목) 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 / 공공기관 및 대학 담당자 119명 참석 ○ 특수법인 현황조사 계획 수립(4.18.) 및 조사결과 취합(5월) - 중앙 및 지자체 설립한 282개 특수법인(현재 135) 중 법률전문가 자문 거쳐 기록관리 대상 확정(6월)
3/4 분기	○ 공공기록물법의 특수법인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계획(안) 수립(8.14) -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해제 기관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 여부 및 특수법인 기준 쟁점사항 검토 ○ 공공기록물법의 특수법인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보고(8.19) - 특수법인의 기준은 ① 특별법에 법인의 설립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특별법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과 조례도 가능
4/4 분기	○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관의 특수법인 여부 검토 결과 통보(11월) - 한국기술자격검정원(산업인력공단으로 기능 편입),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특수법인), IOM이민정책연구원·(재)정동극장·(주)인천항 부산항 보안공사(공공기관 제외)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3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세부과제	2-3-2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대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공공지원과			

<추진계획>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추천('19. 1.)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록관리 분야반영 여부 조사 및 미반영 기관에 지표반영 요청(3월)
-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 내용(지표현황·일정 등)검토 및 협의(4~12월)
- 기재부 주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 및 2020년도 지표 설계(9~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확대													

<추진실적>

1/4 분기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 및 추천(1월)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기록관리분야 반영여부 현황조사(3월) - 기재부 등 3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평가개요·기록관리 분야 반영여부 등 9개 항목
2/4 분기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록관리 반영여부 현황조사 결과보고(5.16) - 기타공공기관(210개 기관) 중 지표반영 기관은 93개 기관 ※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평가결과 분석해 기록관리체계 구축 등 지원 필요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기록관리 지표반영 협의 및 요청(6월) -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체계 검토·협의(55개 기관) 및 경영평가 반영 요청(62개 기관)
3/4 분기	○ 대학평가 기록관리 지표반영을 위한 협의(9월) - 「201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이 10월중 심의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자율지표(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비전)에 기록관리 사항이 포함되도록 반영 요청
4/4	○ 기재부 경영평가 기록관리지표 개선에 대한 협의(11~12월)

분기	- '18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된 지표의 경우 3개년 운영('18~'20년)후 지표개선 및 배점확대 추진(기재부 의견) ※ '21년 지표개선 및 배점확대 협의 예정('20년 11~12월)
----	--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3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세부과제	2-3-3	공공기관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 강화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공공지원과			

<추진계획>

- 공공기관 기록관리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분석(2~3월)
 - 현황조사 분석에 따라 기관유형별·기록관리 분야별·수준별로 그룹화
- 기록물관리 지침 발간 및 교육 추진(신규지정 공공기관 포함)(3~4월)
- 기관유형별·기록관리 수준별 현장 컨설팅 추진(5~11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공공기관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강화													

<추진실적>

1/4 분기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관련 협의(고용노동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내용 고려해 공공기관 인사규정 표준안 반영 - 공공기관 대상 기록물관리 관련 업무 추진시 국가기록원의 의견 청취 후 협의 약속 ※ 3.28(목)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협의 ○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현황조사 계획수립(2월)
2/4 분기	○ 기록물관리 지침 발간 및 교육 ※ 4.9(화) 후생동 대강당 / 979개 기관 중 380 곳 참석 ○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물관리현황조사서 취합 및 분석(5월) - 현황조사 분석에 따라 유형별·분야별·수준별 그룹화 추진 ○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지원계획 수립(6월) - 장기근무 전문요원 초청 간담회 및 기록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등 ○ '19년 신규 기록관리 대상 공공기관 기록관리 업무설명회 개최 ※ 6.27.(목)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 총 11기관 14명 참석

3/4 분기	○ 대학(7월) 및 공공기관(9월) 기록관리 안정화 및 소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기록관리 노하우 조사·공유, 교육·컨설팅 및 기록관리협의 적극 지원 등 ○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전문요원 미배치기관 업무설명회 개최(9.25/9.26) - 전문요원이 아닌 담당자의 기록관리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해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정부산하공공기관(73개), 대학(63개) 참석
4/4 분기	○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관리 컨설팅 추진(10~11월) - 기관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원내 담당부서와 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 추진 ※ 공공기관 :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포항·경주시시설관리공단(5개) - 대학 : 광주·공주·부산·경인교육대학교, 한경대학교(5개) ○ 기록관리 컨설팅 결과 보고 및 공유(12월) - 기록관리 컨설팅을 통한 주요 현안을 원내 관련부서와 공유 및 개선방안 수립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3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세부과제	2-3-4	공공기관 협업체계 강화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공공지원과	

<추진계획>

- 기관별·지역별 공공기관 기록관리협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소속기관별·지역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관리 정책공유 및 현안의견 수시청취로 업무개선
- 기록관리 사안별 연구협의회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역량 증대
 - 기관유형별·분야별(보존기간·시스템·시설 등)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통주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로 해결방안 모색
 - 기록관리 우수·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발전적 기록관리 모델 정립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협업체계 강화													

<추진실적>

1/4분기	○ 국토부 산하 기록관리협의회 참석 및 혁신과제 추진현황 발표(2.22) - 공공기관 기록관리 현황조사서 내용의 사전 공유 및 협의 ○ 「2019년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물 관리지침(안)」 및 「현황조사서(안)」 내용 공유 및 협의(공공기관 및 대학기록관리협의회)
2/4분기	○ 2019년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물관리지침 실무협의회 개최 - 공공기관 및 대학 대상 기록관리협의회 구성방안 및 지원방향 의견청취 ※ 4.9(화) 후생동 대강당(1호 기관) 및 3동 대회의실(2·3호 기관), 행정기록관(대학) ○ 서울·경기·인천지역 지방공사·공단기록관리협의회 참석(4.23/6.21) ○ 국립대기록관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5.2) - 강원대·춘천교대·안동대 등 회장단 참석 대학기록관리협의회 활성화 방안 협의 ○ 국토부 산하 기록관리협의회 참석 및 기관 요청사항 의견청취(6.28) - '워크넷'의 기록물관리 직업명칭 및 직무내용 검토

3/4 분기	○ 서울·경기·인천지역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협의회 참석(9.17) - 공공기관용 RMS시연 및 AI 기록관리 적용사례 소개 등 ○ 국·공립대학(7월), 사립대학(9월) 전문요원(5년이상 재직) 간담회 개최 - 대학 기록관리 현장 정착 사례 및 기관 현안, 요청 사항 등 청취
4/4 분기	○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추계컬로키움 개최 지원 - 일시/장소 : '19.11.28(목)-29(금), 행정기록관 세미나실 - 주제 : 대학의 전시활동 ○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우수·혁신사례 발굴을 위한 방문 인터뷰 - 공공기관 및 대학 각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인터뷰 진행 ○ 서울·경기·인천지역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협의회 개최(행정기록관)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4	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 및 설치 촉진		
세부과제	2-4-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활성화 전략 수립 중점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추진계획>

- 지방기록원 설치·운영을 위한 국가기록원 지원계획 수립('19.2.)
- 지방기록원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광역시·도 총괄협의회 ('19.2.)

지원 계획

- 지방기록원 설치 활성화를 위한 시·도협의회 운영
 - 17개 시·도 담당 과장급 '총괄협의회'와 업무담당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 협의 및 정보공유(현장 회의 개최)
 - ※ 추진현황 공유, 국내·외 사례, 현장방문, 제도개선 논의 등 협력방안 모색
- 「시·도지사협의회」 의장 면담, 의제 채택 추진
 - 시·도지사 개별 면담*으로 지방기록원 설치 분위기 고취
 - * 경기·대구·부산·충남 등 설치가능성이 높은 기관 중심으로 MOU체결 추진
- 지방기록원 설치 의지가 강한 시·도 지역의 여·야의원 면담
- 기록인대회(세션참여), 언론기고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지방기록원 설치매뉴얼 작성, 설립 컨설팅, 시설 견학 및 해외사례 연구 등
 - ※ 우수 참여기관은 포상 추천
- 지방기록원 설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기록원 설치조직 모델 개발 및 재원확보방안, 광역-기초 지자체간 재원분담방안 등을 pool정책연구과제로 추진
- 지방기록원 설치 예산의 국비 지원방안 마련·시행
 - 적격성 심사 재청구 및 설치지원 공모사업 추진
 - 국회, BH 및 시·도와 긴밀한 협의로 국비 및 교부세 확보 지속 노력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설치활성화 전략 수립													

<추진 실적>	
1/4 분기	○ 지방기록원 설치·운영을 위한 국가기록원 지원계획 수립('19.2.) ○ 지방기록원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광역시·도 총괄협의회 ('19.2.14) ○ 대구기록원 설립 지원을 위한 대구시장 면담 및 관계기관 방문(3.19)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및 2.18안전문화재단 방문·관계자 면담 - 지방기록원 필요성 및 우리원 지원방안 설명(대구시장)
2/4 분기	○ 지방기록원 설립 관련 세종시 기초실장 면담(정책부장, 4.12.) ○ 광주기록원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및 광주시장 면담(4.18.)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아시아문화전당 등 관련기관 방문 - 광주맞춤형 지방기록원 설립 필요성 설명 및 우리원 지원 방안 협의(광주시장) ○ 전북기록원 설립 방안 협의를 위한 전북 행정부지사 면담(정책부장, 4.25.) ○ 지방기록원 설립 지원을 위한 부산 부시장 면담(4.30., 5.25.)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사업 국비 지원관련 기재부 협의(30억원) ○ 지방기록원 설립 촉구 관련 언론기고(예정)
3/4 분기	○ 대구기록원 설립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원 간담회 및 행정기록관 시설견학 실시(7.9.) ○ 지방기록원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2회 광역시·도 총괄협의회 개최(7.16.) - 시·도 담당자 서울기록원 시설견학 병행 ○ 지방기록원 설립 국비지원을 위한 기재부 방문 협의(7.19., 7.24., 7.26., 7.29. 8.7. 8.14.) ○ 지방기록원 예산 지원 요청(8.12., 국무총리 비서실장) ○ 「지방특성을 반영한 지방기록원 설립·운영 모델」 수시정책연구과제 신청(9.2.) ○ 기록인대회 세션 참여 신청(9.5.) ○ 우리원-시도 간 기록물합동전시회 예산 신청 및 협의(2억원) - 예결위 입법조사관 예산 설명(9.4.), 행안위 예비검토 진행(9.26.)
4/4 분기	○ 「지방기록원 설립 매뉴얼(안)」 작성(10.31.) ○ 기록인대회 세션 발표 및 토론(11.2.) - (주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걸어온 길, 나아갈 길 - (참여) 우리원(노영중, 김재훈), 경남(전가희), 대구(이숙경), 광주(박혜진) ○ 제2회 경남기록원 기록관리 세미나 참석(12.12.) ○ 정책연구과제 「지방특성을 반영한 지방기록원 설립·운영 모델」연구 완료보고(12.17.) ○ 제3회 시도기록원 담당자 총괄협의회 개최(12.17.) - (내용) '19년 업무성과 및 '20년 업무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기록의 날 공동행사 추진방향 등) - (참여) 경남기록원 기획행정과장, 부산·대구·강원 지방기록원 설립 담당팀장 등 12개 시·도 18명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4	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 및 설치 촉진
세부과제	2-4-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운영지원 강화
과제성격	법률 개정,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추진계획>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대상확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 대상기관 확대 방안(現 광역시도→광역시도,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통합설치 방안 검토
- 시도교육청 의견접수 시 법률개정 여부 검토(장기)

<쟁점사항>

- ▶ 「공공기록물법」 상 기초지자체·시도교육청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가능, 시도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교육청 기록물을 수용하기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 혁신방안
- ▶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의무화 10년 동안 대부분 미설치,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설립 및 운영안정화 지원

운영 안정화 지원계획

①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

- 기록물 이관·정리·보존을 위한 기록관리표준 현실화
 - 안정성은 높으나 다소 경직적인 표준을 지양하고, 현실에 기반한 표준 개정
 - 의무 표준의 유연화로 현장 적용성 강화
- 현실과 차이가 있는 법령개정 요소 적기 파악하여 대안 마련
 - 법률 개정 사항 추가 발굴 및 개정 추진
 - * (예시)행정전자서명, 시점확인정보, 기록물 재이관 등
- 우리 원이 보존중인 지방기록물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재이관에 대한 논의('19.3.~)
- 조직 신설로 법령 의무사항 정상 수행이 곤란한 경우 업무협조
 - 생산현황통보, 기록관리지침 작성·배포,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등

② 신속한 업무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방기록원 조기 안정화 도모

- 신설 기록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보존·복원처리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실습교육 실시
 - 훼손기록물 기초수선, 복원처리 및 상태검사 등 업무 실습
 - 복원처리에 필요한 장비운용 방법 교육
- 각 기록원 상황에 맞는 보존·복원 컨설팅 등 업무 지원

- 보존·복원 실습 업무와 연계한 지방기록원 현장 컨설팅
- 보존 기록물의 특성에 따른 보존·복원처리 컨설팅

③ 중앙-지방기록원장협의회 정례화

- 정기적인 기록원장협의회 개최(연 3~4회)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모색

□ 지방기록관리 자율성·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검토(장기)
 - 지방기록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기록관리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 쟁점사항 >

- ▶ 「지방자치법」 등에 '지방기록관리' 사무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근거가 명시되면 지방기록물관리가 명확한 '지방사무'임을 인정하는 것, 국비지원이 불가
- ▶ 직속기관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시도 기록관' 간의 행정체계와 관련(※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사업소로 설치)
 - 시도에 따라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 판단하여 구성·운영('19. 9.)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대상 확대													
설립 및 운영안정화 지원													
지방기록관리 자율성·책임성 강화													

<추진실적>

1/4 분기	○ 서울·경남기록원 업무 조기 안착을 위한 협의 - 경남·서울기록원 업무 협의 추진(1.24., 3.18.) - 서울기록원 운영지원 관련 요청사항 검토 보고(3.26) ※ 지방기록원 운영 지원관련 기본 원칙 마련
	○ 지방생산기록물 재이관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2/4 분기	○ 경남기록원 요청 업무협조 관련 지원원칙 마련(4.8) - 지방생산 기록물 재이관 방침 및 스캔사본 제공 방안 마련 ○ 지방기록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문 작성 협의 ○ 지방기록원 업무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지원팀 구성·운영 ○ 경남 이관 기록물 사본(스캔본 7,799철, 210,356건) 경남기록원 제공 ○ 서울 이관 기록물 중 스캔 완료 사본 제공 협의(7,514철, 76,632건) ○ 서울기록원 업무지원(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생산현황 통보관리 방법 등)
3/4 분기	○ 지방기록원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지방기록물 반환 규정 신설, 생산현황통보 방식 및 서고 배치 기준 개선 등 - (추진내용) 개정안 부처의견조회(8.26.~9.6.), 입법예고(9.4.~10.15.) 및 사전 규제심사(9.3.) 대응 등 ○ 경남기록원 기록물정리사업 업무 컨설팅(보존인수와 주관, 9.6.) - 정리작업 매뉴얼, 인수인계서 양식, 예외처리 확인서, 검수확인서 양식 등 제공 ○ 서울기록원 AMS 관련업무 컨설팅(9.24.) - RMS-CAMS 데이터 연계,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방안 등 협의
4/4 분기	○ 지방기록원 운영 내실화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규칙」 개정 - 부처 의견에 대한 검토서 작성(~10.18) 및 법제처 사전 심사의뢰(10.18.) ○ 20년 예산 중 경남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예산 확보 - 우리 원 보존 경상남도 생산 기록물을 경남기록원으로 재이관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기록관리 기반 강화
혁신과제	2-5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세부과제	2-5-3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추진계획>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 특위가 제안하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을 반영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추진실적>

1/4 분기	○ 제9회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개최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개편방안 보고서(안) 최종검토 ※ (일시/참석자) '19.1.11.(금) / 참석위원(5명), 원내배석(1명) ○ 제50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개최(2.26.) 및 특별위원회 보고서 보고
2/4 분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개선 - 기록관혁신전문위원회 신설(3.8.),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6.24.) ※ 간사 변경(정책과장→정책부장), 전문위 당연직위원 변경(부장→부·과장) ○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구성방안 검토 - 유사 위원회 및 유관기관 조사, 위원 구성방안 등(4.17./5.29./6.17.)
3/4 분기	○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구성 기본방안」 마련(9.30.) -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 자문(9.16.~9.19.) 등을 반영하여 추천방안 및 기준 마련, 위원 추천단체 선정 *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결과('18.8.2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개선 요청)
4/4 분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개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보고 및 법률자문 실시 ※ 출석위원 정의,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상정 안건 구분 등 규정 신설로 미비점 보완 ○ 제53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12.5.) ○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9명) 위촉 추진(총리실 협의 등, '19.12월말) ※ 위촉식 및 제54회 정기회의 개최('20.1월 예정)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기록전문직 윤리 및 전문성 강화		
혁신과제	3-1	기록전문직 직무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세부과제	3-1-1	직무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과제성격	법령 개정, 행정규칙 제정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교육센터			

<추진계획>

- 직무윤리 기준 정립을 위한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안) 마련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안)에 대한 기록관리교육 자문위원 검토
 - ‘윤리강령’(안)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및 내용 확정(상반기)
 - ‘기록전문직 윤리강령’의 제정 추진(훈령 또는 예규)
- ‘기록전문직 윤리강령’의 제도화 추진
 -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 기본원칙을 공공기록물법령에 반영·검토
 - ※ 법령 반영 결정시 관련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 후 정책기획과에 개정 요청 의뢰
- ‘기록전문직 윤리강령’ 확산 추진
 - 기록관리 교육과정에 교과목으로 편성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선포(원 50주년 기념식), 원내 행사·교육(시무식·임명장 수여식 등)
 - 윤리강령 설명자료 배포, 사이버 콘텐츠 개발 검토 등
- 윤리위원회 설치 및 법령 반영 결정시 후속조치 추진
 -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공공기록물법령에 윤리위원회 조항 신설 여부 등 검토
 - 윤리위원회 설치 결정시 국가기록원 직제 반영 및 공공기록물법령에 윤리위원회 조항 신설 추진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안 마련													
기록전문직 윤리강령의 제도화 추진													
기록전문직 윤리강령 확산 추진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윤리위원회 설치 결정 후 즉시 진행

<추진실적>	
1/4 분기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안) 마련 추진 - 기록관리교육센터 작성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안)* 원내 의견수렴(3월) · 원내 직원 워크숍에서 윤리강령(안) 안내, 메모보고 및 공문 통한 의견수렴 실시 * '18. 6.~11. 기록관리교육센터 내부토론회(9차)를 통하여 윤리강령(안) 마련 ○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를 위한 자료 조사 - 윤리강령의 규율과 기존 공무원 규율의 중복 규제여부 판단을 위한 관련 법령* 등 조사 * 징계위원회(공무원징계령),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
2/4 분기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제정(훈령) 추진 - 원내 확대간부회의 안건 보고(4. 1.) - 원내 직원 의견수렴 반영한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안)」 원장님 보고(4.15.)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제정계획(안) 보고 (5.24.)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국가기록원 훈령 제156호로 제정(5.24.)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선포식(6. 7.)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활용 - 원내 행사(신규·전입직원 임명장 수여 등)시 활용 ○ 기록전문직 직무윤리 기본원칙의 공공기록물법령 반영을 위한 관련자료 조사
3/4 분기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활용 - 원내 각 부서 등에 윤리강령 게시* 추진(7. 3.~5.) * 원장실, 부·관장실 및 각 부서 사무실 등 47개 장소에 부착 - 원내 행사(신규·전입직원 임명장 수여 등)시 활용 ○ 기록전문직 직무윤리 기본원칙 법령 반영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관련 자료조사
4/4 분기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활용·확산 - 원내 행사(신규·전입직원 임명장 수여 등)시 활용 중 ○ 기록전문직 윤리위원회 설치여부 검토 - 윤리위원회 기능과의 중복 규율여부 등 비교 위한 관련 법령 조사 (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현안/쟁점사항>	
○ 기록관리 혁신 3분기 점검회의(10. 7.)에서 위 과제는 기능상 조직관련 부서업무로 기록정책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기록전문직 윤리 및 전문성 강화		
혁신과제	3-2	기록관리 직무윤리 교육 활성화		
세부과제	3-2-1	직무윤리 교육 활성화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교육센터			

<추진계획>

- 국가기록원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지속 개설로 윤리 실천 확립
 - 기록관리교육센터 4개*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운영
 - * 기록관리전문가 신규자·경력자·마스터과정,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과정
 - ※ '20년부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강사양성과정(직무윤리과목 개설) 필수 이수 추진
 - 기관장 대상 원내 회의나 협의체 개최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교육내용 편성·지원(연중)
- 기록물관리기관 직무윤리 교육 추진
 - 기록관리 직무윤리 관련 표준교재 개발
 - 중앙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주관 연례교육 의무화 추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자체 직무윤리 교육 추진을 위한 컨설팅(연중)
 - 2020년 기록물관리지침에 직무윤리 내용 반영 추진
- 직무윤리 사이버콘텐츠 개발 검토
 - 직무윤리가 '19년 사이버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선정시 사업 진행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직무윤리 콘텐츠 제공으로 윤리의식 확산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													
기록물관리기관 직무윤리 교육 추진													
직무윤리 사이버콘텐츠 개발 검토													

<추진실적>

1/4 분기	○ 기록관리교육센터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기본계획 반영) - 기록관리전문가 신규자·경력자·마스터과정,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과정 ※ '20년부터 기록관리교육 강사양성과정으로 확대 추진 예정
-----------	---

2/4 분기	○ 직무윤리 사이버콘텐츠 개발 검토 추진 - '19년 사이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주제(안)에 포함되었으나 '전자기록관리 입문'으로 결정 ※ '20년 사이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주제(안)으로 재추진 ○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운영 - 1기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과정(4월), 기록관리전문가 경력자과정(5월) - 2기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과정(6월)
3/4 분기	○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운영 - 기록관리전문가 신규자과정(9월)
4/4 분기	○ 2020년 기록물관리지침에 직무윤리 내용 반영 추진 - 지원정책과에 직무윤리 관련내용 지침에 반영 요청 ○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운영 - 기록관리전문가 마스터과정(11월), 3기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과정(12월)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기록전문직 윤리 및 전문성 강화		
혁신과제	3-3	기록관리 전문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세부과제	3-3-1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중점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기록관리교육센터			

<추진계획>

- 직무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심층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선행연구) 전문인력 관련 최근 연구용역* 자료 등
 -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인력 구성 및 소요인력’ 연구용역 산출물(정책기획과 ‘18.12) 등 참고
 - (심층인터뷰) 기관유형별 대상자 선정, 내용구성, 일정수립 및 실행
- 교육대상 세분화, 필요역량 도출, 필요 교과목 매칭 등 세부내용 정리
 - (세분화) 교육대상을 기관유형별, 직무별, 경력별로 구분
 - (필요역량) 기관유형별 담당인력의 직무별 필요역량 도출
 - (교과목) 선행연구자료 및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교과목 도출
 - **교육혁신 설문조사 결과보고(교육센터 ‘18.12) 등 참고
- 대상별·영역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설계(안) 개발
 - 교육대상별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가상모델 개발
- ‘함께하는 교육혁신-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계획’ 수립 및 의견조회

- (교육대상) 교육대상 세분화 및 각 대상별 교육목표와 ‘인재상’ 설정
- (교육내용) 대상에 따른 필요역량(지식) 도출
- (교육설계) 대상·경력·분야·단계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연계*형 모듈설계
- (교육체계) 기록관리 강사 풀 구축 및 권역별 거점 기관 자체교육 기반 마련

*대상별(처리과/기록관,전문요원/전문인력/종사자), 경력별(신규자/경력자/관리자), 분야별(전자/분류평가/보존), 단계별(입문/중급/고급) 설계에 따라 ‘19년부터 연차별 시범 적용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선행연구 검토 및 내부토론회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대상별 심층인터뷰 실시													
교육프로그램 설계(안) 개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계획’ 수립 및 의견조회													
교육혁신 체계화 계획 세부사항 실행													

<추진실적>

1/4 분기	○ 직무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심층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선행연구) 전문인력 관련 최근 연구용역* 자료 등 (~2월)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인력 구성 및 소요인력’ 연구용역 산출물(정책기획과 ‘18.12) 등 참고 - (심층인터뷰) 기관유형별 대상자 선정, 내용구성, 일정수립 및 실행 · 중앙행정기관 등 8개 그룹 총45명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대상 8회실시(3.18~4.5)						
2/4 분기	○ 기관유형별 심층인터뷰 결과보고(~4.17) - (주요내용) 직무현황, 필요역량, 필요 교과목, 희망교육프로그램 등 논의사항 정리 ○ 교육대상 세분화, 필요역량 도출, 필요 교과목 매칭 등 세부내용 정리(~5.24) - (세분화) 교육대상을 기관유형별, 직무별, 경력별로 구분 - (필요역량) 기관유형별 담당인력의 직무별 필요역량 도출 - (교과목) 선행연구자료 및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교과목 도출 ○ 대상별·영역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설계(안) 개발(~5.31.) - 교육대상별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가상모델 개발 ○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계획(초안)’ 작성(~6.30) - (주요내용)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인적·제도적 교육기반 마련, 적극적 교육지원 및 협력, 추진체계 및 향후일정 등						
3/4 분기	○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계획(초안)’ 원내외 의견조회 및 결과보고(9.2.) - 원내외 현장전문가 및 기록관리 교육 자문단을 대상으로 서면 조회 실시(7.26.~8.9.) ○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계획’ 최종안 보고(9.23.) 〈 중점추진과제 〉 <table border="1" data-bbox="280 1395 1414 1709"> <tr> <td data-bbox="280 1395 751 1503">① 교육프로그램 리모델링</td><td data-bbox="751 1395 1414 1503"> ① 교육대상 세분화 ② 직무분석 및 교과목 도출 ③ 교육과정 재설계 </td></tr> <tr> <td data-bbox="280 1503 751 1610">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기반 강화</td><td data-bbox="751 1503 1414 1610"> ① 기록관리 교육 의무화 ② 강사양성제도 및 인증제 도입 ③ 교육콘텐츠 개발 활성화 </td></tr> <tr> <td data-bbox="280 1610 751 1709">③ 기록공동체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및 협력 확대</td><td data-bbox="751 1610 1414 1709"> ① 지역거점 기반의 맞춤형교육 확산 ② 민간기록관리 교육 지원 ③ 유관기관 교류협력체계 구축·운영 </td></tr> </table>	① 교육프로그램 리모델링	① 교육대상 세분화 ② 직무분석 및 교과목 도출 ③ 교육과정 재설계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기반 강화	① 기록관리 교육 의무화 ② 강사양성제도 및 인증제 도입 ③ 교육콘텐츠 개발 활성화	③ 기록공동체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및 협력 확대	① 지역거점 기반의 맞춤형교육 확산 ② 민간기록관리 교육 지원 ③ 유관기관 교류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교육프로그램 리모델링	① 교육대상 세분화 ② 직무분석 및 교과목 도출 ③ 교육과정 재설계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기반 강화	① 기록관리 교육 의무화 ② 강사양성제도 및 인증제 도입 ③ 교육콘텐츠 개발 활성화						
③ 기록공동체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및 협력 확대	① 지역거점 기반의 맞춤형교육 확산 ② 민간기록관리 교육 지원 ③ 유관기관 교류협력체계 구축·운영						
4/4 분기	○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계획’ 중점추진과제별 실행 - 강사양성제도 도입계획(안) 수립(12.30.) · 목적 : 현장전문가를 강사로 양성·활용하기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주요내용 :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 운영절차 설계 *(양성단계) 기본강사인증과정 교육과정 운영 ▶ 전문강사 인증심사 설계 ▶ 강사인증서 발급 *(활용단계) 인력풀 등재 ▶ 출강안내 및 실적관리 ▶ 표준교재 제공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단계) 보수교육 및 의견수렴 ▶ 실적확인 및 재인증 ▶ 협조체계 유지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전자기록 관리체계 재설계		
혁신과제	4-1	메타데이터 관리 혁신		
세부과제	4-1-1	메타데이터 정책 마련		
과제성격	표준·지침 반영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전자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현행 메타데이터 운영현황 분석 및 혁신 정책방향 수립(~6월)
 -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등
- 메타데이터 정책방향에 따른 유형별 메타데이터 마련(~12월)
 - 유형별(전자문서, 행정정보, 시청각, 간행물 등)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
 - ※ '20년 이후 유형별로 시스템 구축시 단계적 반영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메타데이터 혁신정책(안) 마련													
유형별 메타데이터 마련													
시스템 반영													

<추진실적>

1/4 분기	○ 현행 메타데이터 운영현황 분석 -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
2/4 분기	○ 기록물 유형별 메타데이터 개선방향 검토 - 메타데이터 개선방향(BPR/ISP결과) 전자기록관리 집중워크숍(6.17.) - (개선방향) 공통메타데이터 + 유형별 필수메타데이터 + 유형별 선택메타데이터 - (유형) 전자문서, 행정정보, 시청각, 간행물 등
3/4 분기	○ 메타데이터(안) 세부항목 검토·보완을 위한 업무협의회 구성운영 - 참여자 명단 확정(7.24.) 및 메타데이터 설계안 사전검토(~8.7.) - 영역별 설계안 검토의견 공유·조정 회의(① 8.8. 웹·간행물 메타, ② 9.5. 시청각 메타)
4/4 분기	○ 검토의견(1·2차) 반영하여 메타데이터(안) 보완(10월)

<현안사항>

※ 고도화 사업에 업무 영역별 메타데이터 추가 의견 조정반영(~20년 6월)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전자기록 관리체계 재설계		
혁신과제	4-2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		
세부과제	4-2-1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기본방안 수립 중점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전자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BPR/ISP 결과를 반영한 유형별 관리체계 초안 마련(~6월)
- 유형별 관리체계 초안에 대한 원내·외 의견수렴(~9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보고 및 확정(~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유형별 관리체계 초안 마련													
원내외 의견수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보고 및 확정													

<추진실적>

1/4 분기	○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초안) 검토 및 원내 의견수렴(~2월) ○ BPR/ISP 결과 및 중장기 실행전략 방향 관련 원내 세미나(3.26.) ※ BPR/ISP결과를 세부과제별로 집중 검토·논의 필요(원장님 지시사항)
2/4 분기	○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ISP 결과 보고(4.30., 전자기록전문위) ※ 추진사업 예산확보 중요, 지능형과제 우선순위 고려, 데이터세트 시범시스템 선정 중요 등 ○ 세부과제별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활용한 집중 논의·검토 추진(4~6월) ①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및 포맷 정책 방향(3.27., 연구세미나) ② 온나라-RMS 통합 및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안(5.14., 집중워크숍) ③ 행정정보데이터 관리 방안(5.22., 연구세미나) ④ 국가기록원 클라우드 전환 방안(5.27., 집중워크숍) ⑤ 시청각기록물 관리체계 재설계안(6.12., 집중워크숍) ⑥ 메타데이터 재설계 방향(6.17., 집중워크숍) ○ 전자기록관리 발전전략 수립 등 향후 전자기록 관련 업무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원내·외 공감대 형성 및 학습 기회 제공 목적의 전자기록 연구포럼 운영 ※ 전자기록의 이해 특강(원장님, 4.22./4.26.), 디지털포렌식의 이해(5.13.), 6월부터 월 1회(외부전문가)
3/4 분기	○ 전자기록 관련 업무역량 강화 및 현안과제 원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3분기 연구포럼 운영 ※ 전자기록 장기보존의 이해(7.31.), 디지털 보존시스템 현황 및 상호운용성 개념 이해(8.28.)

	○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TF) 구성·운영 - 참여인력 확정(~9.9) 및 세부 추진업무 취합·작성(~9.18.) - 사업추진 방향·일정 공유(9.17.), 프로세스 개선관련 검토·분석 회의(9.24., 9.30.) ○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PAMS) ISP 추진결과 공유(9.30.)
4/4 분기	○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TF 회의 -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검토·조정 공유 회의(총9회) - 20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서 등 추진상황 공유 · 토론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례 특강(10.2., 서울기록원) ○ 전자기록 관련 업무역량 강화 및 원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4분기 연구포럼 운영 ※ 지능형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기반 기술 이해(10.10), OAS에서 말하는 I(Information) P(Package)에 대한 해석(11.21)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전자기록 관리체계 재설계		
혁신과제	4-2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		
세부과제	4-2-2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		
과제성격	업무·시스템 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전자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안) 협업 검토 및 확정(1~4월, 내외부)
- 국가기록원-중앙부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범사업팀' 구성·운영(5~12월)
- '19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시범사업 추진(6~11월, 14개)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관리체계 설계													
시범 적용 추진													
관리모델 완성													

<추진실적>

1/4 분기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추진방향 검토 및 확정(1~2월) - 관리체계(안) 및 관리방안 적용 계획 검토·확정 → 3회 집중워크숍 활용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현안연구 워크숍(1.24, 2.14, 2.25) ○ 중앙부처 대상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설명회 개최(3.28.) - 행정정보 기록관리 기본 방향 설명, '19년 시범사업 추진내용 및 일정 등
2/4 분기	○ 중앙부처 '19년 기록관리 시범적용 대상 수요조사 및 대상 확정(4.2.~30.)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적용 시범사업 대상 시스템 선정(6개 기관) ※ 전자인사시스템(인사혁신처), 국토종합공부시스템(국토부) 등 14개 시스템 ○ 국가기록원-중앙부처 추진 협업팀 구성 및 간담회 개최(5.24.) ○ '19년 행정정보데이터 시범적용 사업 계획 수립(5.29) 및 조달 추진(6.7.) ○ 행안부 관보시스템 사례 조사 관련 회의 개최(6.18.) 및 분석 착수
3/4 분기	○ '19년 행정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시범사업 착수(8.27, 인사처 등 5개 기관) - 시범적용 사업 계약(8.2) 및 세부 추진 사항 확정 및 전체 대상 착수 보고

	○ 시범적용 대상 기관별 분석 자료 수집 방문 협의(9.3~9.10.) - 인사처(전자인사관리), 국토부(부동산종합공부, 국토정보시스템), 환경부(지속가능포털, 환경분쟁조정심의), 교육부(전자자료관, 교육연수 등 5종)에 대한 담당,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방안 등 협의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시범기관 사전 자료 확보 및 1차 분석 완료(9.30.) - 시스템 매뉴얼, EA자료 등 확보 후 분석을 통한 기준표 초안 작성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추진 기관간 공동검토로 관리기준표 항목 현행화(9.17.)
4/4 분기	○ 시범적용 대상 14개 시스템에 대한 행정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개발(11.29.) ○ 시범부처별 행정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 구축 완료(12.13.) - 대상 시스템 특성에 맞는 보존 및 처분 방안을 협의하여 구축 ○ 행정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원 도구 개발 완료(12.13.) - 관리프로세스에 따른 추출·이관용 도구(SIARD*_KR)와 평가·폐기 지원 도구 개발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 확정(12.30.,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전자기록 관리체계 재설계		
혁신과제	4-2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		
세부과제	4-2-4	이관모델 재설계		
과제성격	시행령 개정,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전자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이관모델 재설계 대비 법령·표준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협의 추진(1월~)
-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 시범 적용을 통한 관리 모델 도출(~12월)
- 온나라-RMS 통합 등 시스템 개편에 따른 이관기능 단계적 반영(20년 이후)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법령·표준 등 개정 검토													
관리모형 시범적용													
시스템 반영													

<추진실적>

1/4 분기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관련 시행령 검토(1~3월) - 관리원칙 및 적용 근거 등을 반영한 시행령(안) 마련(4개 조항 신설) 제출(3.7)
2/4 분기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항목(안) 설계(60개 항목, 4월초) ※ 정책기획과와 협업하여 4.19~5.2일까지 5회에 걸쳐 기관 대상 법령개정 설명회 개최 ○ 온나라-RMS 통합, 클라우드 전환 등 시스템 고도화 예산확보 추진 - 온나라-RMS 통합, 국가기록원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 관련 사업 추진 필요성 본부 스마트서비스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재부 등에 설명 대응(4~5월) ○ 온나라-RMS 통합 등 추진대비 BPR/ASP 검토 추진(5월) - 온나라-RMS 통합 관련사항(5.14.), 국가기록원 클라우드 전환 관련사항(5.27.) → ① 추진 세부사항 검토 및 구체화 등 후속조치 필요, ② 시스템 고도화 대비 RMS, CAMS 현황 및 그간 기능개선과제, 향후 고도화 방향 등 검토 필요 ○ 손상파일 검사 방법 이관단계 적용 연구개발(R&D) 추진(4~6월) - 온나라 → RMS → CAMS 단계별 손상파일 자동검사 적용 가능성 및 방향 분석 등

3/4 분기	○ 온나라-RMS 통합과제 추진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부서 협의(7~9월, 2회) - 온나라-RMS 통합관련 국정자원 협의(8.7.), 온나라-RMS 통합관련 본부 협의*(9.18.) * 스토리지 통합방안 추진으로 우선 협의, 세부사항 검토·구체화 등 후속 협의 필요 ○ 온나라-RMS 통합, 클라우드 전환 등 시스템 고도화 정부예산(안) 확보(“20년, 71억) ○ 손상파일 검사 방법 이관단계 적용 연구개발(R&D) 추진(7~9월) - 손상파일 자동검사 기능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API 연계규격 검토·마련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프로세스(안) 마련 및 시범 적용 착수(8.27.) - 14개 시범 시스템에 대한 적용 검토 ○ 데이터세트 이관 및 보존 방안에 대한 기술 규격 관련 협업 검토(9.17.) - 유관 부서 사업(3개) 간 개발 내역 및 관리항목 및 보존 기능 등 공유활용
4/4 분기	○ 온나라-RMS 스토리지 통합방안에 따른 세부사항 검토·구체화 -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 통합에 따른 이관프로세스 재정립 등 ○ 손상파일 검사 방법 이관단계 적용 연구개발(R&D) 추진(10~12월) - 기록관리시스템(CRMS, CAMS) 내 손상파일 자동검사 프로세스 적용 방안 마련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프로세스 확정 및 가이드 마련(12.3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관리체계 설계 및 시범기관 공유(12.23.) - 관리기준표 중심 종합 관리시스템 기능 도출 및 시스템 설계(안) 마련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전자기록 관리체계 재설계		
혁신과제	4-3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 및 포맷정책 재설계		
세부과제	4-3-1	전자기록 장기보존 기본정책 및 상세 이행계획 수립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전자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원내·외 의견수렴 및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안) 수정·보완(~6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보고 및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확정(~9월)
 - 보존정책의 분야별(매체재수록, 포맷변환 등) 상세계획 수립(~12월)
- ※ 상세계획은 원내 관련부서(기록정보기반과, 보존인수과, 복원관리과 등) 협업 추진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													
장기보존정책 상세 이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1/4 분기	○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안) 작성 및 원내·외 의견수렴(~3월) ○ 「3월 기록관리 연구세미나」에서 발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 토론(3.27) ※ 우리원 홈페이지(혁신게시판)에 정책(안) 공유(3.25)
2/4 분기	○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안)에 대한 각급 기관 의견조회(4.11~4.27)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기관 등 약 1600기관 공문 발송 ○ 「2019년 제1회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보고(4.30) ※ (주요 의견) 보존정책 수립 필요, 보존포맷의 다양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며, 진본성·무결성 검증기술 확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대통령비서실, 서울기록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 의견제출(~5월) ※ (주요 의견) 영구기록관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제도 기반 필요, 보존포맷의 다양화, 개별 기관에 맞는 무결성 검증체계 선택 등

3/4 분기	○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안)에 대한 기관 주요의견 원내* 검토회의(7.25) * 정책기획과, 연구협력과, 전자기록관리과, 지원부, 복원관리과, 대통령기록물생산지원단 ○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안) 관련 원내·외 의견 검토결과 보고(8.8) ※ (검토 기본방향)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장기보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가 기록원이 참고가능 기준, 정보 등 제시 ※ 의견 제시기관(대통령비서실, 서울기록원, 부산진구청)과 검토결과 공유
4/4 분기	○ 문서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 CRMS 사용 주요 기관 및 업무협의회를 통한 기관의견 조희(10.11., 10.15.) ○ 기록관리 혁신 점검시, 포맷변환 체계개선 관련 쟁점사항 논의(10.7.) ○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TF 8차 회의시 안건 보고 및 공유(11.6.) ○ 보존포맷 변환 체계 개선 관련 향후 조치 필요사항 등 원내 검토회의(12.20.)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V	전자기록 관리체계 재설계		
혁신과제	4-3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 및 포맷정책 재설계		
세부과제	4-3-2	포맷정책 재설계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전자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원내·외 의견수렴 및 전자기록 보존포맷 정책 재설계(안) 수정·보완(~6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보고 및 전자기록 보존포맷 재설계(안) 확정(~9월)
- 보존포맷정책에 따른 상세 이행계획 수립(~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전자기록 보존포맷 정책 수립													
포맷정책 상세 이행계획 수립													
전자기록 보존포맷 정책 재설계 이행													

<추진실적>

1/4 분기	○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안) 작성 및 원내·외 의견수렴(~3월) ○ 「3월 기록관리 연구세미나」에서 발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 토론(3.27) ※ 우리원 홈페이지(혁신게시판)에 정책(안) 공유(3.25)
2/4 분기	○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안)에 대한 각급 기관 의견조회(4.11~4.27)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기관 등 약 1600기관 공문 발송 ○ 「2019년 제1회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보고(4.30) ※ (주요 의견) 향후 자율적 개발로 장기보존패키지가 증가 되면 호환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에서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 필요 ○ 대통령비서실, 서울기록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 의견제출(~5월) ※ (주요 의견) 문서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야 아카이브로 이관하는 제도(선호·허용포맷 등) 재검토 및 국가기록원 DFR시스템 등을 통한 보존 우수/취약포맷 제시 필요 등 ○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 활용 체계 현황 분석 및 '19년 사업계획 수립(6.10.) ※ ('19년) DFR 고도화 → ('20년) 기관 시범사용 → ('21년) 전면확대 → 장기적 RIN으로 확대 발전

3/4 분기	○ 전자기록 포맷정책(안)에 대한 기관 주요의견 원내* 검토회의(7.25.) * 정책기획과, 연구협력과, 전자기록관리과, 지원부, 복원관리과, 대통령기록물생산지원단 ○ 전자기록 포맷정책(안) 관련 원내·외 의견 검토결과 보고(8.8.) ※ (검토방향)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장기보존체계를 구축·운영 등 ※ 의견 제시기관(대통령비서실, 서울기록원, 부산진구청)과 검토결과 공유 ○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개정을 위한 표준화 방향 논의(9.17.) ※ (주요내용) 표준 구성, 장기보존포맷 메타데이터 개정 방향, 잠김인증정보 등
4/4 분기	○ 전자기록 장기보존포맷 규격 표준화 작업반 운영(9.17., 10.29.) - 표준 개정 기본방향, 인증정보 및 메타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 논의 - 폴더형 장기보존포맷 패키징 구조, 영구기관 적용시 고려사항 등 논의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V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		
혁신과제	5-2	비공개 상한제도 개선		
세부과제	5-2-1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중점		
과제성격	시행령 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공개서비스과			

<추진계획>

-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자문회의 개최(6월)
 - (구성)제도운영, 공개재분류 전임자 등 원내 직원
 - (내용)기록물 성격별 분류 및 상한기간 검토, 관계기관·정책포럼 등 외부의견 수렴 세부계획(안) 검토 등
- 기록물 성격별 관계 기관 비공개 상한 기간 사전 의견 조회(7월)
 - 행정안전부(개인정보), 국방부·외교부(국방·외교), 법무부(행형), 보건복지부(의료) 등
- 「비공개 상한기간」 시행령(안) 외부 의견 수렴(8-9월)
 - 정책포럼*을 통한 비공개 상한기간의 사회적 합의 추진
 - * (일정·방안)연구협력과와 협의 / (참여기관)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 학회, 변호사 등
- 기록공개심의회 안전 보고(11월)
 - 정책포럼 등 추진상황, 법개정 내용 및 신설 조항 등 보고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비공개상한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방안 마련													
내부 자문회의 개최													
관계 기관의견 조회													
정책포럼 개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법령(안) 보고													

<추진실적>

1/4 분기	○ 비공개기록물 공개제도 개선 계획(안) 검토(~3월) 및 수립·보고(4.5) - 그간추진실적, 현황 및 문제점,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및 일정 등 ○ 기록물 성격별 항목분류 및 상한기간 설정(안) 검토(3월~) - 외국사례 및 기존 시행령(안), 반복적 비공개 재분류 이력, 관련 개별법령 등
-----------	--

2/4 분기	○ 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안) 마련(5~6월) - 그간(2006, 2010, 2012년 3차) 원내 추진경과 내용 검토 및 분석 - 소장기록물 비공개기록물 현황파악, 30년경과 비공개 기간 연장 이력분석 - 상한제도 운용 방향, 상한기간 지정 대상 선정 및 기간 설정 등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의견 수렴(6월) -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안), 정책포럼 주제 선정 등 논의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3/4 분기	○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자문회의 개최(결과보고, 7.11) - (개최개요) 6.28/7.9, 성남/대전·세종, 공개재분류 전·현직 담당자 등 전체 18명 - (주요내용) 비공개 상한기간 설정(안) 운영방향, 상한기간 대상 유형분류, 유형별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검토 및 논의 ○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원내·외 의견수렴(9.18, 정책포럼) - 해외사례 및 관련법령,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검토 분석을 통한 비공개 상한제도의 운용 방향 및 상한기간 지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정보공개센터, 학회, 공공기관, 군기관, 중앙행정, 교육청, 지방행정 등 총 114명 참석
4/4 분기	○ 타법령(정보공개법)과의 관계 검토를 위한 협의(10.29) - (개요) '19.10.2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공개서비스과 과장 및 담당자 참석 - (내용)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공개법과의 상충여부 등 법령간 관계정립 ⇒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제도 도입으로 양 법률간의 상충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12.11~계속) -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기관과의 내용 검토 및 협의 ※ 헌법기관(국회방문협의* 12.11) 및 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 등 * 소장 비공개기록물 유형 및 관련규정 공유, 비공개 상한지정 방안은 대체로 동의함 ○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에 대한 기록물공개심의회 보고(12.17) - 비공개 상한기간 설정(안), 원내·외 의견수렴 결과 등 추진내용 및 현황 ⇒ '기록물 상한제도'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이관 및 공개와 밀접한 사항으로 특수기록관과의 협의 검토 필요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V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		
혁신과제	5-2	비공개 상한제도 개선		
세부과제	5-2-2	30년경과 비공개기간 연장심의 절차 마련		
과제성격	시행령 개정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공개서비스과			

<추진계획>

- 「30년경과 비공개 기간 연장 심의 절차 마련」 관련 내부 자문회의 개최(6월)
 - (구성)제도운영, 공개재분류 등 원내 관련 업무 담당자 등
 - (내용)의견수렴('18년추진) 내용을 토대로 법령 신규 조항 검토 등
 - ※ 혁신과제 2-1-1(기록관 기능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 기준정비)과 연계 검토
- 법령(안) 검토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7월)
 - 기록관, 혁신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 기록물공개심의회 법개정(시행령) 안건 보고(11월)
 -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신설 조항 등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30년경과 비공개 기간 연장 심의 절차 마련													
내부 자문회의 개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법령(안) 보고													

<추진실적>

1/4 분기	○ 비공개기록물 공개제도 개선 계획(안) 검토(~3월) 및 수립·보고(4.5) - 그간추진실적, 현황 및 문제점,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및 일정 등
2/4 분기	○ 법령(시행령) 개정안 마련(6월) - 기록관, 특수기록관의 「30년경과 비공개 기간 연장 심의 절차」 관련 조항 신설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의견 수렴(6월) - 법령 개정(안), 기록관 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 논의

3/4 분기	○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자문회의 개최(7.11) - (개최개요) 6.28/7.9, 성남/대전·세종, 공개재분류 전·현직 담당자 등 전체 18명 - (주요내용)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연장심의 절차 방안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보유 - (논의결과)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공통된 사안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을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및 보완장치 필요 ②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제도운영에 따른 현실적 업무처리 반영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검토·협의 필요 등
4/4 분기	○ 기록물공개심의회 보고(12.17) - 시행령 개정안*, 원내·외 의견수렴 결과 등 추진내용 및 현황 * 30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장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자체 심의*를 거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심의에 따라 연장 * 공공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 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V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
혁신과제	5-2	비공개 상한제도 개선
세부과제	5-2-3	생산 후 20년경과 공개원칙 도입 검토
과제성격	법률 개정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공개서비스과	

<추진계획>

- 「생산 후 20년경과 공개원칙 도입 검토」 관련 내부 자문회의 개최(6월)
 - (구성)제도운영, 공개재분류 등 원내 관련 업무 담당자 등
 - (내용)의견수렴('18년추진) 내용을 토대로 공개원칙 단축(안) 검토
- 법령(안) 검토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7~8월)
 - 기록관, 혁신 자문위원, 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비공개상한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방안 마련													
내부 자문회의 개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실적>

1/4 분기	○ 비공개기록물 공개제도 개선 계획(안) 검토(~3월) 및 수립·보고(4.5) - 그간추진실적, 현황 및 문제점,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및 일정 등
2/4 분기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의견 수렴(6월) - 공개원칙 단축(30년→20년)의 실효성 등 논의 ※ 최근 3년('15~'17년)의 비공개 사유 중 개인정보 사유가 94.5%에 달함
3/4 분기	○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자문회의 개최(7.11) - (개최개요) 6.28/7.9, 성남/대전·세종, 공개재분류 전·현직 담당자 등 전체 18명 - (주요내용) 공개원칙 단축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 - (논의결과) ①외국의 공개원칙 단축은 기록물 이관 시점(30년→20년)과 연관되어 있어

	생산 10년 후 이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은 실효성이 낮음 ②그간의 재분류 이력에 따르면 30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연장되는 유형이 개인정보 관련이 대다수(94.17%)를 차지하고 있어 단축의 실익 여부 검토 필요
4/4 분기	○ 기록물공개심의회 보고(12.17) - 원내·외 의견수렴 결과 등 검토 현황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V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		
혁신과제	5-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 공개		
세부과제	5-3-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 공개		
과제성격	법률·시행령 개정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공개서비스과			

<추진계획>

○ 내부 자문회의 개최(6월)

- (구성)제도운영, 공개재분류 등 원내 관련 업무 담당자 등
- (내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의 공개 기준 및 열람 절차, 공개재분류 등 추진계획(안)검토

※ 혁신과제 5-2-1(비공개 상한제도 도입)과 연계 검토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 공개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하반기)

- 정보공개법령 관계 부처(행자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

○ 외부 의견 수렴, 법령 개정(안) 마련('20년 상반기)

- 비공개 상한제도(혁신과제 5-2-1) 추진 등 공개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점차·보완적으로 법령(안) 검토·수립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외국 사례 조사·검토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내부 자문회의 개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수렴													
외부 의견 수렴 및 법령개정(안) 마련													

<추진실적>

1/4 분기	○ 비공개기록물 공개제도 개선 계획(안) 검토(~3월) 및 수립·보고(4.5) - 그간추진실적, 현황 및 문제점,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및 일정 등
2/4 분기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의견 수렴(6월) - 비공개기록물의 학술·연구지원을 위한 열람 방법 및 절차 방안 - 30년 미경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의 「정보공개법」과 구분된 별도 공개기준 적용에 대한 논의

3/4 분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공개 기록물 공개기준’ 원내·외 의견 수렴 -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를 위한 상한기간 지정 방안에 대한 논의 ※ 원내자문회의(6-7월) 및 정책포럼(9.18) 개최(5-2-1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혁신과제와 연계검토) ○ 본부 정보공개정책과와 「정보공개법」 관련 의견 요청 - (내용) 비공개기록물 열람 및 사본 제공의 근거를 정보공개법이 아닌 공공기록물관리법 적용방안 - (답변)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을 떠나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4/4 분기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법’과의 관계 정립 및 관련조항 등 검토 ※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6호다목의 ‘공익’이나 ‘권리구제’ 확인에 필요한 소명자료의 구체적 범위, 요건 등 ⇒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의 공개 관련 선언적 규정, 구체적 공개 절차에 관한 별도 세부 규정 등 마련 필요 ○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기준’ 외부 관계기관 의견 수렴(11~12월) - 타법령과(정보공개법)의 상충 등 협의(10.29,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 - ‘비공개기록물 상한제도’ 도입 관련 유관 기관 방문 협의(12.11. 국회기록보존소)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V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		
혁신과제	5-5	기록물 기술모델 재설계		
세부과제	5-5-1	기록물 정리·기술체계 재설계		
과제성격	업무 개선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공개서비스과			

<추진계획>

- 기록물 기술정보 서비스방식 개선방안 마련(1-2분기)
 - 기술정보 구축·서비스현황 분석 및 해외 기술정보 서비스사례 조사
 - 출처중심 검색방식 보완 및 기술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방안 도출
- 기록관리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리·기술체계 마련(3-4분기)
 - 다양한 기록유형을 포괄하는 미래형 기술정책(안) 도출 및 의견수렴
 -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다중개체기술모델(Ric) 적용방안 검토
- 이용자 친화적인 기술정보 축적(2-4분기)
 - 정리·기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술 대상량 확대 방안 검토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8				2019				2020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기술정보 서비스방식 개선방안 마련													
미래형 기술정책(안) 마련													
이용자 친화적인 기술정보 축적													

<추진실적>

1/4 분기	○정리·기술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원내 업무간담회 개최(1.29./1.31) - 정리·기술체계 현황, 문제점분석, 개선방향 등 검토보고 및 참석자 토론 ※ 1.29일(화) 성남. 1.31(목)일 대전·세종 / 원내 전문가 12명 참석 ○업무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정리·기술체계 개선방안 검토 보고(3.8, 나라기록관)
2/4 분기	○기술정보 구축·서비스 현황 및 정리·기술 업무절차 보고 (4.1./4.3.) ○기 구축 기록물군·계열 정비 및 미분류기록물 계열분류(1만여권, 5~6월) ○기록물 기술정보 서비스방식 개선방향 검토(6월) - 기술정보 연계성 제고, 접근점 다양화(생산기관 주제 등) 및 통합 이용가이드 제공방안 등 검토

3/4 분기	○ 소장기록물 정리·기술체계 개선방향 관련 원내·외 의견수렴(8.23, 연구세미나) - 기술정보의 분절성 보완 및 다중개체기술모델(Ric) 적용방안 검토 ○ 기 구축 기술정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현방안 업무협의(9.17~) - CAMS 및 국가기록포털 기능개선 방안 및 장기 추진과제 협의
4/4 분기	○ 다중개체기술모델을 적용한 정리·기술 시범추진 (10-12월) - (대상) 재정(국고관리기능)·금융 분야 기록물 3,000여권 - (내용) 기능시소러스를 계층적으로 구조화, 기관전거 데이터 정비, 기관단위 및 기술계층별 기능어 입력 => 기능어를 매개로 기술정보 간 유기적 연계 모색 ○ 기술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학술연구자 3인) 요구사항 수렴(11.15, 11.26, 12.3)
<현안/쟁점사항> ○ 중장기과제로 전환, 소장기록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리·기술정책 수립 필요 - 다중개체기술모델을 적용한 시범기술 확대, 정리·기술 프로세스 고도화, 시스템구현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형 기록물을 포괄하는 미래형 기술정책(안) 도출 - 해외·민간수집기록물 및 역사기록물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리기술 정책 수립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생산·이관·수집		
혁신과제	1-1	대통령기록물 생산지원 및 분류/평가 체계 개선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기준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생산지원단			

<추진계획>

○ 대통령기록물 분류 체계 및 선별·평가 정책 마련(~'20.12월)

- 분류·평가 체계 관련 시행령 개정안('19.6월) 및 분류·평가 체계 초안 마련('19.12월)

- 대통령기록물 분류 체계 확정, 선별·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 마련 등 정책 마련('20.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대통령보좌기록물 업무기능 및 기록유형 분석								
대통령자문기관 단위과제 보존기간 재설계 지원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초안 마련								
대통령기록물 선별·평가 정책 초안 마련								
분류체계 및 선별·평가 정책 최종안 마련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보존기간 개선 추진 계획(안) 보고(2.21) ○ 대통령자문기관 분류체계 관리 -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재설계(4개 기관) ○ 19대 대통령기록물 선별, 평가 정책 수립 추진 계획(안) 보고(2.27)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신설 :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별도 운영 제안
2/4 분기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체계 개선 - 대통령기록관 혁신토론회(5차) 내부 의견수렴 및 추진현황 보고(5.7) - 대통령기록물 분류·평가 체계 개선 전문가 회의(6.21) 및 상반기 추진 결과 보고(6.26) - 대통령보좌기관 조직·업무기능 조사 및 기록유형 분석(계속) ○ 19대 대통령기록물 선별, 평가 정책 수립 - 해외 아카이브즈의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 분석 보고(5.3) ○ 대통령기록물 선별, 평가 정책 수립 관련 해외사례 검토 관내 세미나(5회)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보존기간 별도 운영 관련 본원 협의(5.20) 및 보고(5.30)
3/4 분기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체계 개선 -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 이슈페이퍼 작성(9.30) - 대통령보좌기관 조직·업무기능 조사 및 기록유형 분석(계속)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별도 운영 관련 개정안 마련
4/4 분기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 체계 개선 - 대통령보좌기관 조직·업무기능 조사 및 기록유형 분석(계속) - 대통령비서실 분류체계(경제분야 등) 초안 보고(12.26) -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초안 보고(12.31) - 대통령자문기관 신설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12월)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	생산·이관·수집									
혁신과제	1-2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과제성격	시스템개선					추진완료시기		2022			
담당부서	보존복원과										
<추진계획>											
○ 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설계('19.8월) 및 시스템 고도화(~'20.12월)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PAMS ISP) 수립 완료(~'19.8월) - 예산 확보 및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19.12월),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22년)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2021		2022	
		1	2	3	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ISP 사업 추진											
시스템 고도화 예산 확보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시스템 고도화	PAMS, 데이터세트										
	포털 및 웹기록										
	SNS 등 신규 유형										
<추진실적>											
1/4 분기	○ 생산기관 정보화전략계획 및 PAMS ISP 정보 공유(제2차 내부토론회) ○ PAMS ISP 사업 계약절차 진행 및 사업자 선정·계약('19.3.7.) ○ PAMS ISP 사업 업무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19.3.19.) ○ PAMS ISP 사업 착수보고회 및 제1차 업무협의회 운영('19.3.29. 관장외 26명)										
2/4 분기	○ PAMS ISP 관련 현황분석을 위한 내·외부 인터뷰 추진('19.3.26.~4.18.) * (대관) 4개과 14개팀, (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 (외부) 서울기록원 ○ PAMS ISP 사업 제2차 업무협의회(환경·현황 분석결과 공유) 운영('19.4.30.) ○ 20년 시스템 고도화 소요예산 설명(본부 '19.4.25./'19.5.17./기재부 '19.5.30.) ○ 중간보고회 및 제3차 업무협의회(목표모델 개선방향 공유) 운영('19.6.5. 관장외 41명)										
3/4 분기	○ PAMS ISP 사업 제4차 업무협의회(목표모델, 이행계획 보고·논의) 운영('19.7.16.~17.) * 부서별 집중 토론(대관 업무별 12개팀 참여) → 4개 분야 42개 요구사항 도출 → 최종보고서 반영 ○ PAMS ISP 사업 검수·종료(8.4.) 및 최종보고회 개최(8.21.) ○ '20년도 차세대 PAMS 구축 예산 대응 → 정부(안) 37.6억 확정 ○ '20년도 차세대 PAMS 구축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검토 추진(9월) *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등 SW 기술검토, 예산확정에 따른 사업범위 검토 등										
4/4 분기	○ '20년도 차세대 PAMS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조달청 발주 추진 - (내용) ISP*기반 차세대 PAMS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산출내역 등 작성 ※ 사업계획 수립(11~12월) → 일상감사·사전협의(12.20.) → 적정 사업기간 산출(12.24.~27.) → 계약의뢰('20.1월초 예정) ○ '20년도 차세대 PAMS 구축을 위한 구축 추진단 구성 및 1차 회의개최(12.23.) - (구성) 시스템구축팀(5), 프로세스검증팀(19), 정책지원팀(3)으로 구성, - (역할) 각 분야별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 단계별 산출물 검토, 해당 업무 프로세스, 기능 구성 및 결과 검수 등 수행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1	다양한 기록유형별 등록 메타데이터 정의 및 업무방식 개선											
과제성격	업무개선, 기준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비전자기록물 등록 메타데이터 및 업무방식 개선(~'19.12월) - 현황조사·분석 및 메타데이터 개선방안 마련(~'19.9월) - 정리·등록 업무방식 개선방안 마련(~'19.12월) ○ 전자문서·데이터세트·웹기록 등 정리·등록 체계 수립(~'20.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													
비전자 기록물 메타데이터 개선(안) 수립													
정리·등록 업무방식 개선(안) 수립													
전자문서 등록 체계 수립													
웹기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기록정보자료 등록 체계 수립													
<추진실적>													
1/4분기	○ 역대 대통령 행정박물 전수조사 및 형태별 현황 분석(3.18., 메모보고) ○ 관리전환 대통령 시청각 기록물 현황 및 등록 항목 분석(2.28., 메모보고)												
2/4분기	○ 행정박물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방안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제4차 내부토론회*) * 일시/장소/참석 : '19.4.26.(금) 10:00 ~ 11:00, 중회의실, 대통령기록관장 외 26명(※ 발표: 이승민) ○ 대통령 시청각 기록물 등록 메타 및 업로드 항목 검토(내부 자문회의*) * 일시/장소/참석 : '19.5.16.(목) 14:00 ~ 15:30, 중회의실, 기록서비스과 팀장 외 15명(※ 발표: 김성겸) ○ 시청각 등록 메타데이터 개선방안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제8차 내부토론회*) * 일시/장소/참석 : '19.6.18(화) 15:00 ~ 16:00, 중회의실, 대통령기록관장 외 20여 명(※ 발표: 김성겸) ○ 역대 대통령 미등록 간행물 등록전 폐기 대상 선별 및 정리 추진(~7월*) * 내외부 자문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 심의 완료												
3/4분기	○ 공공기록 유형별 메타데이터 설계안 내용 검토(원내 검토회의*) * 일시/장소/참석 : '19.8.8.(목) 14:00 ~ 16:00, 대전스마트워크센터, 업무협의회 11명(※ 참석: 임근혜, 이승민) ○ 공공기록 시청각 메타데이터(안) 검토·보완(원내 검토회의*) * 일시/장소/참석 : '19.9.5.(목) 14:00 ~ 16:00, 대전청사 2동 505호, 업무협의회 5명(※ 참석: 김성겸)												
4/4분기	○ 역대대통령 비전자기록물 등록오류 분석 및 PAMS 반영 * 비실명화 처리 결과(8.26.), 역대 대통령 비전자기록물 등록오류 분석 결과 보고(12.19.) ○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행정박물 처리방안 보고 * 행정박물 용도별 유형분류 및 건별 검토의견, 처리방안 등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 보고(12.26.)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2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관계 법령개정 및 관리업무기능 시스템 반영(~'20.12월)
 - 시행령 개정안 마련(~'19.3월)
 - 해제된 지정기록물 전자적 인계 및 데이터 전수조사(~'19.12월)
 - 미등록 지정기록물 등록 및 관리업무기능 시스템 반영 (~'20.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정기록물 전자적 인계 추진								
지정PAMS 데이터 전수조사 및 현행화								
미등록지정기록물 정리 및 시스템 등록								
지정기록물 관리수행 업무 시스템 추가 반영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4항, 제10조의2 개정 및 제10조의5, 제10조의6 신설 : 전직대통령 열람, 지정절차 투명화, 해제 절차 추가, 열람대리인 선정 등 * 경과 : 개정과제 수요조사(~1.14.) → 1차 검토회의(3.6.) → 2차 검토회의(4.9.)
2/4 분기	○ '18년 해제 지정기록물 인계 계획 보고(내부결재) - 비전자 일반 2,352건, 비밀 568건 인계완료(5.13, 5.16 메모보고), 전자 진행중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취합본 완성 및 의견수렴(~4.29.)
3/4 분기	○ 지정PAMS 내 지정해제 기록물 현황 및 인계방안 검토보고(내부결재, 7.29) - 지정해제 그룹별 프로세스 진행상황 점검 및 인계·미인계 대상 선별, 오류해결 ○ 지정PAMS 데이터 전수조사 및 현행화 추진 - 인수년도 오류 수정, 시스템 등록누락 데이터 확인 및 인계방안 마련 ○ 대통령기록정보시스템 고도화 ISP에 지정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반영 - 인계그룹설정, 인계 후 데이터 삭제기능, 제16대~제18대 암호호화 연계 필요성 등
4/4 분기	○ 지정해제된 전자기록물 인계처리 및 일반/비밀 PAMS 반영(39,910건, 11.21) ○ 지정해제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보완사항 정리 및 개선방안 마련·보고(11.21) - 개선사항은 차세대 PAMS개발 제안요청서에 반영(지정PAMS는 '21년 개발예정)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3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기준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관계 법령개정, 운영규정·기준 마련 및 평가·폐기 추진(~'20.12월)
 - 시행령 개정안 마련(~'19.3월), 운영규정 마련(~'19.6월)
 -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기준 마련(~'19.12월)
 - 평가·폐기 계획 마련 및 추진(~'20.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평가대상 조사								
'19년 기록물 평가폐기 계획수립								
자문회의 운영규정 제정 및 평가회의 구성								
'19년 폐기 대상 선정 및 검토회의								
한시기록물 분석 및 평가 폐기 기준 마련, 집행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계획 수립								
평가 폐기대상 선정 및 폐기 추진								

<'19년도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시행령 제7조제1항 개정 및 신설 : 평가 및 폐기 절차 등 개선 * 경과 : 개정과제 수요조사(~1.14.) → 1차 검토회의(3.6.) → 2차 검토회의(4.9.)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대상 선별 검토(제2차 내부토론회*) * 일시/장소/참석 : '19.3.19. 14:00 ~ 16:00, 중회의실, 대통령기록관장의 26명(※ 발표: 기록관리과장)
2/4 분기	○ 한시기록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내부 검토회의(4.17.)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취합본 완성 및 의견수렴(~4.29.) ○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 자문회의 운영규정 보고(5.2.) 및 구성(5.20.) ○ 19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및 간행물 평가·폐기 계획 보고(6.20.) ○ 대통령기록관리 자문회의 개최(6.21.) : (안전)데이터세트 및 간행물 폐기
3/4 분기	○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심의(7.3.) : (안전)데이터세트 및 간행물 폐기 ○ 폐기 결정 대상 기록물 후속조치 계획보고(7.11.) 및 고시(7.15.~7.26.) ○ 폐기 결정 대상 간행물 10,795권 폐기 집행(8.27.) 및 결과보고(9.3.)
4/4 분기	○ '19년 보존기간 만료 한시기록물(4,612책) 분석 추진(9월~10월) ※ 향후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

'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4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공개재분류 자체수행, 세부기준 정비 및 절차간소화로 공개 강화(~'20.12월)
 - 공무원 인력 확보 및 자체추진 여건 마련(~'19.4월)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19.7~12월)
 -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정비('19.9~11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공개재분류 자체전환								
세부기준정비								
작업절차 간소화								
공개재분류공개강화								

<추진실적>

1/4 분기	○ '19년도 공개재분류 추진계획('19.1.29., 내부결재) ○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개선 방안 보고('19.3.6., 메모보고/ '19.3.22., 전문위원회 보고)
2/4 분기	○ 공무원인력확보, 교육 및 업무 투입('19. 5월) ○ 공개재분류 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서식 개선('19. 7월)
3/4 분기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계획 수립('19.8.20.) ○ 공개재분류 업무 강화 및 대내외 공개를 위한 정책문 작성
4/4 분기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80개⇒62개), 전문위원회 보고('19.12.20.) ○ 대통령기록관 공개재분류 정책문 자문회의 개최 및 혁신과제 발표('19.10.) ○ 공개재분류 실무회의 2회 개최('19.11.15/12.18.)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II	등록·재분류·지정 등
혁신과제	2-5	수집기록물(구술·기증 등) 관리 체계 개선
과제성격	법령개정,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관리과	

<추진계획>

- 구술 아카이브 체계 구축 및 기증기록물 관리체계 개선(~'20.12월)
 -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구축 용역 및 방안 마련(~'19.10월)
 - 공개기준 마련 및 업무절차 개선(~'19.12월)
 -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0.12월, PAMS 고도화사업과 연계)
 - 비공개 기증기록물 단계적 재분류('20년 이후) 및 디지털방식 구술채록('21년 이후)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아카이브 구축 방안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기증기록 공개재분류								
구술기록 데이터 전환								

<추진실적>

1/4 분기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보고('19.1.26., 메모보고)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사업계획('19.2.27., 내부결재)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조달의뢰('19.3.04., 발송)
2/4 분기	○ 기술협상 결과 통보 및 계약요청('19.4.22., 발송)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사업자선정 결과 보고('19.4.23., 메모보고)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계약체결(4.29.) 통보('19.5.2., 접수)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5.23.) 및 결과보고(5.24.메모보고)
3/4 분기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추진현황 및 워크숍 계획보고(7.22., 메모보고)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수립 워크숍 개최(8.8.) 및 결과보고(8.14.메모보고) ○ 구술기록 분류체계 개선 관련 자문회의 안건 보고(9.18., 메모보고)
4/4 분기	○ 구술기록 분류체계 개선 관련 자문회의 개최(10.4.) ※ 디지털중심의 구술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정립, 분류체계 설계, 시스템 개선방안 등 ○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사업 완료보고(11.13.) 및 개최결과 보고(11.22.)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보존·복원·시스템		
혁신과제	3-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세부과제	3-1-1	전자매체 관리원칙 마련 및 이관·보존프로세스 재정립		
과제성격	업무개선, 지침마련		추진완료시기	2019
담당부서	보존복원과			

<추진계획>

- 전자매체 관리원칙 마련 및 이관·보존프로세스 재정립
 - 표준·비표준(비전자 등록) 전자기록물 이관용 전자매체 이관·보존처리절차 관련 지침 초안 마련('19.10.) 및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확정('19.12.)
 -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도구(S/W) 고도화 사업 지원 및 이관도구 기능 고도화 관련 TF 참여, 결과보고 및 시연('19.12.)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			
	1	2	3	4
전자매체 이관·보존 절차관련 지침 마련				
전자기록물 절차 개선				
이관도구 고도화				

<추진실적>

1/4분기	○ 16대 대통령기록물 행정데이터세트(인계인수시스템 등) 분석(~3월/등록 현황, 일치여부 등) ○ 전자기록 이관도구 고도화 R&D 과제 추진(복원관리과 협업) - 디지털포렌식 기반 현장용 이관도구 고도화·대용량 전자기록 이관·분석 시스템 개발 등
2/4분기	○ 대통령기록물 행정데이터세트 분석 결과 보고('19.5.9., 메모보고) - 첨부파일 중복(5,335중 13,781파일)·해시값 불일치·분류오류 확인 ○ 비전자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현황점검 결과 보고('19.6.20., 메모보고) - 비전자로 등록된 전자매체(시청각 제외) 451점(443철) 실물 확인 ○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매체 상태점검 결과 보고('19.6.25., 내부결재) - 16·17대 이관매체(전자문서, 행정데이터세트) 120점 실물현황·열람가능여부 등 확인
3/4분기	○ 대통령 전자기록물 손상유무 시범점검 결과 보고('19.7.12., 내부결재) - 첨부파일 중복(5,335중 13,781파일)·해시값 불일치·분류오류 확인 ○ 디지털매체·포렌식실운영 기본계획(안) 보고('19.9.3., 내부결재)
4/4분기	○ 비전자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상태점검 결과 보고('19.10.16., 내부결재) - 현황점검 완료된 전자매체 451점 열람가능여부, 철·건 정보 일치여부 등 확인 * 경과 : 1차 점검(8.1.~9.6.) → 2차 검토(~9.18./오류분석) → 결과 보고(10.16.) ○ 디지털포렌식실 업무처리 유형별 공간 개선 완료('19.12.24.) - 기본계획(안) 반영된 업무처리 유형별 디지털포렌식실 업무 공간 개선 * 경과 : 계획보고(12.3.) → 공간 개선(12.4.~12.23.) → 결과 보고(12.24.) ○ 고도화 완료된 전자기록 이관도구 배포 및 사용자 교육('19.12.19.) - 이관도구 고도화 기능 설명 및 실제 이관기록물 활용 사용자 교육 * 대통령경호처 전자기록물 이관에 시범적용 예정('20.1.中) ○ 대통령기록물 전자매체 보존관리체계 개선 방안 결과 보고('19.12.24., 내부결재) - 이관용 전자매체 관리 지양 및 수록기록물(전자파일) 중심의 기록관리체계 확립 * 업무처리별 표준운영절차(SOP) 지침 마련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보존·복원·시스템
혁신과제	3-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세부과제	3-1-2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공간 정비 및 효율화
과제성격	업무개선, 매뉴얼 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6.
담당부서	보존복원과	

<추진계획>

-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공간 정비 및 효율화(~'20.6.)
 -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현황분석(~'19.10.) 및 매뉴얼 마련(~'19.12.)
 - 원본기록물 보존 원칙(복본 간행물 분리) 확립 및 분리 재배치(~'19.12.)
 - 보존서고 공간 수요량 예측에 따른 공간활용 장기계획 수립('20.1.~6.)
- * 행정박물·선물류 유형별 현황분석을 통한 보존서고 공간 효율화 및 19대 이관 대비 공간 정비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				2020			
	1	2	3	4	1	2	3	4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								
원본기록물의 보존 원칙 확립								
보존서고 장기계획 수립								

<추진실적>

1/4 분기	○ 문서류 정수점검 추진 계획 수립('19.1.31., 내부결재) - 원본 외 관리물품(생산기관 황화일 등) 분리(151,636철 중 17,000장) ○ 보존서고 공간정비 및 효율화추진 : 대형 액자류 해포 및 재배치(~3월)
2/4 분기	○ 보존서고 내 복본 간행물 및 관리물품 분리·폐기 검토('19.4.11., 관내회의) ○ 행정박물·선물(훼손방지 포함) 상자제작 및 격납 : 343상자 ○ 간행물·시청각 및 박물류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 수립('19.6.12., 내부결재)
3/4 분기	○ 시청각기록물 보관상자 개선 추진계획 수립('19.7.11., 내부결재) - 매체별 보존상자 제작 및 보존상태 개선(자기·전자매체류 9,382철/1,245상자) ○ 간행물 납본 외 복본기록물 현황파악 및 분리(정수점검 병행)
4/4 분기	○ 시청각기록물 보존상자 개선 완료 - 시청각매체(자기·전자류) 보존상자 개선(9,382철/1,245상자) 완료(메모, '19.10.1.) ○ 원본기록물의 보존 원칙 확립 - 대통령기록물 관리물품(노후황화일 등) 파기 추진 계획수립('19.11.12.) 및 완료(총 2,696박스, 32,516철/'19.11.21.) * 간행물 3권이상 현황 파악(1,977철, 3,259권) 및 추진방안 검토·협의(관리과 '19.11.13.) ○ 기록유형별 서고배치 매뉴얼 마련 및 보존서고 공간정비 - 행정박물·선물류에 대한 유형·규격정보 전수 조사 실시(8,305철) - 유형별 배치 방안 기준 등 매뉴얼 보고('20년 1분기/예정)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Ⅲ	보존·복원·시스템
혁신과제	3-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체계 개선
세부과제	3-1-3	대통령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데이터 품질 개선
과제성격	업무개선, 표준마련	추진완료시기 2020. 6.
담당부서	보존복원과	

<추진계획>

- 대통령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데이터 품질 개선(~'20.12.)
 - 데이터 검증기준에 따른 데이터 추출 및 분석('19.3.)
 - 오류, 누락 데이터 정비 추진(~'19.12.)
 -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 표준(안) 마련('20.1.~6.)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				2020			
	1	2	3	4	1	2	3	4
데이터 추출 및 분석								
데이터 정비								
연계 기술규격 마련								

<추진실적>

1/4 분기	○ 데이터 검증 기준에 따른 데이터 추출 및 분석(2월~3월) ○ PAMS 데이터 오류 현황분석 수립 및 오류 유형(89개 유형/약 2천3백만개) 분류 ○ 오류유형 분석에 따른 처리방안 검토협의(기록관리과) - 단기처리 가능대상*(전자기록여부 코드, 날짜형식 오류 등, '19.3.27. 방침협의) * 자체정비 처리가능한 대상량은 오류데이터 전체 약2천3백만개 중 33%인 7,795,812개 - 장기처리 가능대상*(비공개호수 오류, 첨부개수 오류, 생산부서명 누락 등) *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오류 및 누락 데이터(66%, 약1천5백만개)는 협의(기록관리) 후 추진예정
2/4 분기	○ PAMS 데이터 정비 추진계획('19.4.16., 메모보고/ '19.4.18., 내부결재) ○ PAMS 오류 데이터 중 날짜형식 오류 등 8개 유형 1차 정비 추진(5.7.~) - PAMS 데이터 정비 추진 현황 보고('19.6.12., 메모보고) * 처리현황 843,715개/7,795,812개, 처리누계10.8% / 건 전자기록여부 등 4개유형 정비 ○ 데이터 정비 관련 이력관리 기능개선 - 변경이력보기 기능추가('19.5.17. 완료) - 감사증적 기능 신설에 따른 검토(항목, 데이터 구조 등) ○ PAMS 데이터베이스 진단(구조, 성능) 실시('19.5.21.~6.8.)
3/4 분기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정·시행('19.9.6.) ○ 오류데이터 정비 관련 감사증적 기능 마련 - 감사증적 기능 마련 관련 PAMS 화면 구현 1차* 완료('19.9.25.), 2차** 구현('19.10.30.) * 1차 : 인수, 품질검사, 서고배치 등 기록철 관련 9개 항목, 기록건 관련 14개 항목 ** 2차 : 상태검사, 탈산, 디지털화 등 6개 항목 ○ PAMS 오류 데이터 정비 완료('19.9.30.) * 정비현황 7,795,306개/7,795,812개(99.9%) 완료(생산일자 오류 471개, 기록유형구분 오류 27개 미처리)
4/4 분기	○ 오류데이터 정비 관련 PAMS 내 감사증적 기능 구현 완료('19.12.13.)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Ⅳ	서비스(콘텐츠, 전시 등) 활용
혁신과제	4-1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세부과제	4-1-1	목록·원문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과제성격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서비스과	

<추진계획>

- 이용자 중심의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강화(~'19.12월)
- 소장기록물 목록 서비스 프로세스 구축 및 비실명화(~'19.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목록 및 원문서비스 강화								
포털 정비								

<추진실적>

1/4 분기	○ 2019년 대통령기록포털 및 콘텐츠 개선계획 수립(3.22) - 주요 국가정책 기록물 조사, 기존 콘텐츠 보완, 검색 편의 제고 등 포털 기능 강화 * 내부 검토회의(1월 1회, 4월 4회), 전문가 자문(2월), 사례조사(2월) ○ 대통령기록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서비스 추진계획 수립(1월) 및 추진 - 기 작업분(13~16년) 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 반영 ○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대통령기록포털 이용자 현황조사
2/4 분기	○ 2019년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4.10) 및 추진 ○ 2019년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4.23) 및 추진 * 관내 오류 및 개선사항 제안 이벤트(4월), 검색기능 고도화 자문회의(4.29) ○ 대통령기록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서비스 추진 - 10대~14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 반영 ○ 「국가재건최고회의 컬렉션」(자체 콘텐츠) 구축(5.2)
3/4 분기	○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착수(7.17) ○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강화사업 착수(8.12) 및 감리계획 수립(9.10) ○ 대통령기록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 서비스 추진 - 15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실명화 포털 반영 ○ 하반기 자체 콘텐츠(동백림 사건) 구축 계획 수립(9.5)
4/4 분기	○ 역대대통령 국가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완료(11.16) 및 포털 콘텐츠 구축(12.24) ○ 해외 기록관리기관(NARA, TNA, 케네디기록관 등 5개) 포털 벤치마킹 결과보고(11.22) ○ 대통령기록포털 고도화 완료 및 오픈(12.24) * 메뉴 통폐합, 검색기능 개선, 콘텐츠 보완(기증, 대통령 연설문, 편지, 기획전시 등) ○ 대통령기록 목록 비실명화 및 포털 서비스 추진 * 16대-18대 대통령기록,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비실명화 처리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Ⅳ	서비스(콘텐츠, 전시 등) 활용
혁신과제	4-1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세부과제	4-1-2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과제성격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서비스과	

<추진계획>

-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19.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전시기본계획 마련								
대통령기록 교육·체험 강화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편 내·외부 자문회의(3회) ○ 대통령기록물 자원봉사자 8명 위촉(2.22) ○ 대통령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점 이전(2층→1층, 3월) ○ 2019년 견학·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2.13) * 유관기관 간담회(1월)
2/4 분기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편 기본계획 수립(4.26) ○ 2019년 대통령기록전시관 전시연출 용역사업 추진계획 수립(5.8) 및 추진 ○ 2019년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계획 수립(6.21) 및 추진 ○ 「대통령 의전 이야기」 프로그램 계획 개발(4.25) ○ 「2019년 대통령기록관 견학·체험 수기 공모전」 계획 수립(6.12)
3/4 분기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편 전시대상 기록물 선정 추진 * 서화류 해제사업(전북대, 8.9~), 문서류 내부회의(9.10), 가구류 전문가 간담회(8.22) 등 ○ 2019년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기록물 선정(회화류 40점, 9.24) * 전문가 자문회의(8.8), 회화류 해제사업(한국미술연구소, 8.21~) 등 ○ 대통령기록전시관 견학·체험 프로그램 운영(83회 1,796명) * 초등 기록문화 41회 834명, 중고등 진로탐색 23회 528명, 초청프로그램 19회 435명
4/4 분기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편 및 보완사업 완료(12.20) ○ 2019년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개막(대통령의 미술품, 12.24.) ○ 대통령기록전시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38회 852명) * 초등 기록문화 23회 517명, 중고등 진로탐색 14회 322명, 초청프로그램 1회 13명 ○ 대통령기록관 견학·체험 수기 공모 접수(~11.20) 및 시상(12.19) * 최우수 3, 우수 9, 장려 15명

'19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점검표

분야	Ⅳ	서비스(콘텐츠, 전시 등) 활용			
혁신과제	4-1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세부과제	4-1-3	대통령기록연구 지원 확대			
과제성격	법령개정	규정마련	업무개선	추진완료시기	2020
담당부서	기록서비스과				

<추진계획>

- 연구지원센터 운영규정(~'19.12월)

<추진일정>

세부과제	2019				2020			
	1	2	3	4	1	2	3	4
연구지원 확대								

<추진실적>

1/4 분기	○ 대통령기록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등 연구활동 조사(1~2월) - (국내)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14개 기관 - (외국) 클린턴재단, 버락 오바마 도서관 등 10개 기관
2/4 분기	○ 국내 대통령 관련 연구자 현황 조사(4월) ○ 연구자 간담회 개최(정일준 교수외 4명, 5.23) ○ 2019년 대통령기록물 활용 연구지원 방안 수립(6.13) - 공개결정 기록물 DB 구축·제공, 학생 모의학술경연대회 개최, 연구활동 지원 창구 운영 등
3/4 분기	○ 대통령기록물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7.1) - 개인연구자 상담신청 접수 및 처리 등 연구지원 승인 절차 마련 - 공개기록물 열람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 등 학술연구 지원 ○ 대통령기록물 활용을 위한 교사간담회 개최(충청권 소재 고교교사 5명, 7.31) -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학생 모의학술토론대회' 관련 의견수렴 ○ 대통령기록관 공개결정 기록물 DB(엑셀목록 + PDF 사본) 구축 - 공개결정 대통령기록물 분류 정리 및 내용 검토(약 100건)
4/4 분기	○ 대통령기록 전문가 강연회(대통령기록관 소장 서화에 담긴 이야기) 개최(10.31)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11.13) ○ 대통령기록관 소장 미술품(회화류) 해제사업 결과보고(11.18) ○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통령 선물(장신구) 감정평가 결과보고(12.19) ○ 대통령기록관 시민강좌(대통령의 미술품) 개최(12.24)